Weekly 공감
No.293
korea.kr/gonggam
2015.02.09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특별기획 박근혜정부 2년 정책 성과 I

새로운 국가혁신

설 명절 물가안정, 中企·서민 지원 확대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스캔하면 공감 블로그를 만납니다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경제영역

3년의 약속, 30년의 성장

복지포털

복지로가 새로워졌습니다

복지신청은 복지로, 부정신고도 복지로



찾 고 1. 360종의 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살피고 2.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나 이웃에 대한 사연을 신청하면 도움을 드립니다.

줄이고 3. 보건·복지 부정수급,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신청은 복지로

복지혜택이 필요할 때 찾아주세요.

-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복지지원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 유아학비, 기초연금 등 12개 복지사업

도움이 필요할 때 사연을 남겨주세요.

- 직접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웃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사연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연결됩니다.
- 신청한 사연의 진행상황은 홈페이지나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15. 2월까지는 어려운 이웃 집중 발굴 · 지원 기간입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청하세요.

부정신고도 복지로

부정하게 사용되는 복지재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신고사실이나 내용은 비밀이 유지되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정이 발견되면 비용환수, 행정처분,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가 이루어지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어린이집,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신고포상

부정수급 신고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044-202-2092)

주요 부정수급 유형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지원을 받기 위해 본인 및 가족의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 허위로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를 단절하는 경우

어린이집
- 어린이집 아동 또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 또는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국적상실, 이민출국, 주민등록 말소 등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 의료기관이 환자가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진료횟수를 부풀리는 등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 식자재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것보다 많이 결제한 후 보조금을 횡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hwis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Korea Health and Welfare Information Service

국가혁신, '책임감 크기'에 달렸다



민경찬
연세대 수학과 교수·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명예대표

오는 2월 25일이면 박근혜정부 출범 만 2년이 된다.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여파 속에서 창조경제를 기치로 걸고 대한민국의 성장 역량을 극대화하며 국민의 행복과 새로운 국가 부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등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와 문화를 혁신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다. 이는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혁신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모두가 급변하는 국내외적 위기 상황을 공유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혁신의 필요성과 의미에 공감하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도 공감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단기적으론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나는 게 일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어떤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선 대개 정책과 제도가 핵심적 수단이 되지만, 대다수 과제는 여러 요소로 얽혀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려면 생태계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또한 혁신에 공감하더라도 개인 혹은 소속집단의 논리와 계산에 빠져들면 논쟁과 갈등의 범위를 넘어서기 힘들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사회병리 현상은 위험 수준이고 성장잠재력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다음 세대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도 될지 생각해보자. 그건 바로 우리 자녀들의 생존 이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서 국가 전체 생태계의 유익(有益)을 계산하며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한다. 그게 서로 윈윈(win-win)하는 길이다. 고통이 일부 따르겠지만 기존의 틀을 한 번은 과감히 깨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사회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면, 첫째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먼저 그려야 한다. 철학, 비전, 전략을 세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모두가 혁신에 대한 가치와 보람을 공유하는 일이다.

둘째, 기존의 획일적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기관, 영역, 개인에 따라 맞춤형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면 가능하다. 공무원들도 성취감을 갖도록 목표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인정해줘야 한다. 도전과 열정이 담기게 실패도 허용해야 한다. 공무원이 경직되면 국가는 더 경직된다.

셋째, 정부 부처와 부처 간, 그리고 관련 기관 간 관계도 역할 분담의 개념으로 서로 돕는 '동반자적, 수평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서로 간의 관점과 인식 차이를 좁히는 일이며, 자율성과 생산성을 키우는 일이다. 창조경제에서 강조하는 융합, 협업도 결국 사람의 융합부터 시작되며, 창의성도 여기에서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신'을 정책과 제도, 법 등의 시스템에서만 추구하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사랑과 배려로 풀어가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올해는 을미사변 120년, 광복 70년이 되는 해이자 유네스코가 정한 '빛의 해'다. 이젠 국내외적으로 위기를 느끼는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빛'이 돼야 한다. '책임감의 크기가 무대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했다. 우리 각자는 혁신의 길에서 책임감의 크기를 어떻게 그릴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자. G

Weekly 공감

CONTENTS

2015. 2. 9 No.293 통권 394 korea.kr/gonggam



표지 이야기

'당신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범 공무원 158명을 초청해 포상했다. 이날 포상 대상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등에 앞장선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과 대외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들이다.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에게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였다.

11 특별기획 박근혜정부 2년 정책 성과 ① 국가혁신

12 공공개혁
과도한 복지 군살빼기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

16 부패 척결
공공부문 비리 척결
부정하게 새는 돈 막는다

20 국민생활안전 Ⅰ
산업 현장 무재해 도전
'안전 선진국' 원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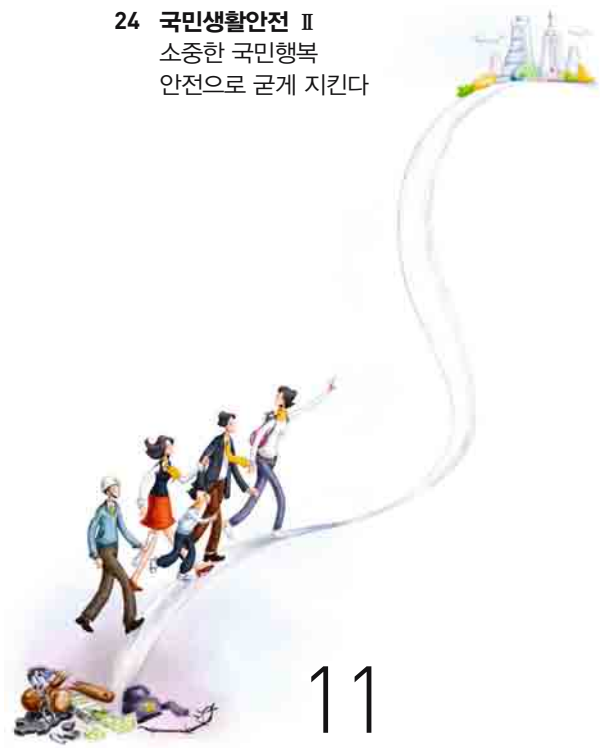
24 국민생활안전 Ⅱ
소중한 국민행복
안전으로 굳게 지킨다

28 국민생활안전 Ⅲ
헌법 토론… 착한운전 마일리지…
국민 법질서 의식 제고

32 정책 소통
공공정보 공개 '정부3.0'
국민 생활 업그레이드

36 지역발전
지역민 희망 북돋워
국민행복 큰 나무 키운다

40 공무원연금
"지금 하지 않으면 파탄…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대적 과제"



11







01 이 주의 공감

04 독자마당

06 공감 사진관
벌써 봄이 찾아왔네

08 이 주의 키워드

정책 & 인터뷰

46 2015 설 민생안정 대책
자금난 중소기업에
설 전후 18조1000억 원 푼다

50 국민 편의
어르신! 고령農 복지 달력이 나왔습니다

52 빛나다 대한민국 공무원②
창의적 사고에 열정을 더했죠

연속기획 | 정부 공모·보조사업 정보
54 한국 문화 제대로 배울래요
55 해양산업 건전한 생태계 구축

56 동물복지
내장형 칩 등록 의무화 논의
반려동물 버리면 처벌 강화

58 문화 현장
인기 영국 작가 알랭 드 보통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질문 던져라"

60 알아두세요
짜증 나는 "고객님,…" 전화·문자 한 번에 차단

61 알림
"국민이 기자다"

문화 & 예술

62 생활과학 이야기
손가락 보면 운명이 보인다?

63 정책광고로 보는 어제와 오늘
자나 깨나 가축 전염병 예방

64 소통과 공감
긍정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위클리 공감〉 저작물은'공공누리(www.kogl.or.kr)'의 출처 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발행일 2015. 2. 9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김종덕
제작협력 동아일보사
인쇄제본 프린피아
제작문의 044-203-3016
구독문의 02-2625-3294 jjsmall@korea.kr

댓글에 답글

더 가까이, 더 빠르게
디지털로 만나는 〈위클리 공감〉

모바일, 태블릿, PC 등 어디서나 〈위클리 공감〉의 주요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고 공유하세요.

〈위클리 공감〉 디지털 기사, 이곳에서 만나세요!

탭진 리디북스 블로그 페이스북

해당 서비스는 iOS, 안드로이드 기반의 모든 디바이스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korea.kr/gonggam
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tapzin.com/app/
ridibooks.com
koreablog.korea.kr
www.facebook.com/wegonggam

공유와 댓글을 통해 많이 참여해주세요.



291호 '국민건강 지킴이—금연, 알고 보면 참 쉽죠'를 읽고

흡연자들은 본인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를 끊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담뱃값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끊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래도록 흡연한 우리 남편도 담배를 단번에 끊을 수 있을까요. 기사를 통해 금연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정보를 많이 알게 돼 유익했습니다. 〈위클리 공감〉에서 더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기사를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연을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윤향수(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길)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금연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개인별 상담과 함께 금연 계획을 짜드리고 니코틴 패치 등의 보조제도 드립니다.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담뱃갑에 적혀 있는 금연상담전화 1544-903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전화 주시면 그다음부터는 금연상담전화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설 이후에는 병·의원에서 금연 상담과 치료를 받으신 경우, 12주 기준 6회의 진료·상담비, 12주 약값을 지원해드립니다. 꼭 금연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유미 사무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291호 '2015 부처 업무보고—식품안전관리 강화 학교급식소 전수 점검'을 읽고

개학을 하면서 다시 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해 궁금증도 많았고 막연한 믿음을 갖기엔 불안감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더 많이 사용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급식의 질을 높였으면 합니다.

차상례(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2009년부터 식재료의 원산지 및 품질등급 등은 반드시 학교에서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이 학교에 공급되지 않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사전 안전성 조사 및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학교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로 사무관(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2월 23일 오전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기사,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위클리 공감〉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편집실에서

두 눈을 끔뻑~끔뻑~ 배가 고파 보이는데 눈치만 살핍니다. '바스락' 하는 작은 소리만 나도 줄행랑. 얌전하고 겁 많은 제 반려견 이야기입니다. 이 녀석, 순진해 보이는 큰 눈에 반해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했습니다. 유기견 출신이죠. 작년 추석 우리 집에 온 녀석은 이제 편안해질 만도 한데 여전히 눈치를 많이 봅니다. 누군가 말하길 또다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매년 유기동물 약 10만 마리가 거리로 쏟아집니다. 정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동물등록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동물 유기 시 처벌도 강화됩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제도와 더불어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될 때라야 가능할 것입니다.

집에 가면 제 눈치만 살피는 녀석의 눈을 보고 말해줘야겠습니다. '오래도록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살자'고.

조영실 위클리 공감 기자

알림 게시판



통계청 제7기 블로그 기자단 모집

응모 자격 통계에 관심 있는 대학생 중 SNS(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활용 및 블로그 기사 작성 가능한 자
지원 방법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이메일(lea1221@korea.kr)로 제출
선발 과정 서류 접수 후 면접 심사
접수기간 2월 15일까지
활동기간 3 ~ 12월
활동 내용 월 1회 이상 기획회의 참석, 취재 콘텐츠 발굴, 분야별 취재 활동을 통한 콘텐츠 제작, 생산된 콘텐츠 확산을 위한 블로깅·모니터링 및 SNS 활동
활동 보상 우수기자 포상(매월 및 연말), 소정의 원고료 지급, 수료증 발급, 다양한 통계청 행사에 참여
공모 문의 통계청 대변인실 042-481-2045



제3차 갈등 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

공모 목적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 및 제도 등을 발굴
공모 자격 국민 누구나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갈등 사례에 관한 개선이면 가능함
(예시) 소액 통원의료비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자동차 운전면허증 지역표기 삭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 간소화 방안, 무인 민원발급기 민원인 대기선 표시 방안 등
공모 방법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www.pcnc.go.kr)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간 3월 20일까지
당선작 발표 5월 중 개별 통지 및 국민대통합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시상 계획 대상 100만 원(1명), 우수상 50만 원(5명 내외), 장려상 20만 원(10명 내외)
공모 문의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조정지원부 02-6262-2224, 2226

삼세판 퀴즈



01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크게 3가지 ▶미래 해양기술 개발 ▶ 해양 중소·벤처 지원 ▶ ○○○○ ○○○○○ 지원으로 나뉜다.

02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1~4호기 건설 관련 지원 방안에 합의하고 지난해 11월 21일 울진군청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타결은 협상을 시작한 이래 ○○년 만이다.

03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 '○○○○○○○' 등을 중심으로 고액 벌금·추징금 징수 강제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 〈위클리 공감〉을 읽어보세요.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빈칸의 답을 '삼세판 퀴즈 293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2월 23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세종특별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 〈위클리 공감〉 담당자 앞(우 339-012)

〈위클리 공감〉 291호 삼세판 퀴즈 정답
01 한국문학 **02** 9100 **03** 영덕 강구항

〈위클리 공감〉 291호 삼세판 퀴즈 당첨자
이예슬(광주 북구 부남길)
박순미(부산 기장군 일광면 이천10길)
이영주(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남경혜(대구 수성구 국채보상로)
최영희(경기 의정부시 신곡로)

벌써 봄이 찾아왔네

'입춘대길 건양다경(立春大吉 建陽多慶).'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2015년 입춘(2월 4일)을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은 박물관 내 전통한옥 오촌댁 대청마루에서
입춘첩(立春帖)을 쓰고 대문에 붙이는 시연행사를 가졌다.
봄이 시작되는 입춘에는 한 해의 희망과 풍년을 기원하는 여러 세시풍속이 전해져오고 있다.

사진 박해윤 기자





KOR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공감 Briefing

숫자로 보는 뉴스

894억 2000만 달러

2014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894억2000만 달러로 종전 사상 최대인 2013년 흑자(811억5000만 달러)보다 82억7000만 달러(10.2%)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상수지 가운데 상품수지는 흑자 규모가 827억8000만 달러에서 928억9000만 달러로 늘었다. 수출(6215억4000만 달러)은 전년보다 0.5%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수입(5286억6000만 달러)이 1.3% 감소했다.

동아DB



512만 명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국민은 총 512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소득 귀속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총 근로소득자는 1636만 명으로 근로자 3명 중 1명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기본공제를 감안할 경우 연봉 2286만 원인 근로자는 세금이 없다.

영국 정부가 초등학생 수학 실력을 높이기 위해 졸업 전까지 곱셈 구구단을 12단까지 외우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니키 모건 교육부 장관은 선데이타임스 기고문에서 "초등학생 3명 가운데 1명이 산수를 못한다"며 "구구단 인증 시험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해 수학과 국어 교육 부문에서 선진국 26개국 중 최하위권인 23위에 머물렀다.

12단

1010만 5000명

고졸 취업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통계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4년 고졸 취업자는 1010만5000명으로 전년(983만6000명)보다 2.7%(26만9000명)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53만3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는데 절반을 고교 졸업자들이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에서 고교 졸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9.2%에서 지난해 39.5%로 0.3% 포인트 상승했다.

이 주의 키워드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 앞으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해당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직무능력 위주로 평가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겠다는 의미다. 직무능력은 직무수행능력과 직업기초능력으로 나뉜다. 올해는 한국서부발전 등 30여 개 공공기관에서 NCS를 기반으로 공개채용한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NCS 기반 채용을 이른 시간 내에 100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역의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2015년 입영일자 본인선택
전면 전산 추첨제 도입

2 306보충대 해체 후 사단 직접 입영



306보충대 해체 후 2015년부터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직접 입영

3 현역병 모집 선발 평가요소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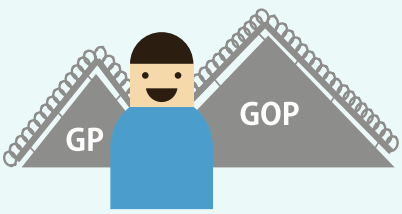
모집병 선발 시 성적 반영 축소 등
자격, 면허, 전공 위주로 선발

4 현역 모집병 전형 참석자 여비 국고 지원



면접, 체력검사 등 모집 전형 참석자
교통비 등의 여비 국고 지원

5 육군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전투력 강화를 위한
분·소대 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6 성실 복무 사회복무요원 연가 가산



병가 없이 성실 복무한 사회복무요원
2일 범위 내에서 연가 가산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www.normal.go.kr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특별기획

박근혜정부 2년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혁신큰 걸음

저출산·고령화란 난제를 안은 채 글로벌 저성장 시대를 맞은 정부는 지난 2년간 뼈를 깎는 고통으로 공공개혁을 추진하며 국가혁신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 도입했던 공공기관의 방만한 복지제도를 현실화하고, 부채비율을 큰 폭으로 낮췄으며,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부패를 척결하는 데 성과도 거두었다. 국민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능동적으로 시행하는 서비스, 데이터 개방에 힘썼으며 지역의 자립능력을 키우는 데 적극 협력했다.

공공개혁, 부패척결, 국민생활안전, 정책소통, 지역발전 등 5개 분야에서 이뤄진 혁신의 2년을 집중 점검한다.



일러스트 · 김용성

과도한 복지 군살빼기 공공기관 개혁에 박차

'8대 방만경영' 축소·폐지… 비정상 과제 총 245개 정상화 작업 중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월 16일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 결과를 확정하고 지난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이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했다.

중간평가 대상인 53개 기관은 모두 이행, 자율관리기관 249개 중 12개 기관 및 부설기관 1개가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설기관(총 16개)은 302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별도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등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은 원칙대로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2015년 7월 이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행 확정 시 임금 인상은 소급 적용한다. 또한 미이행 기관은 2015년 6월 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 동결에 더해 추가로 2016년 임금도 동결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는 국가혁신의 첫걸음으로 출범 초기부터 강도 높은 공공개혁을 추진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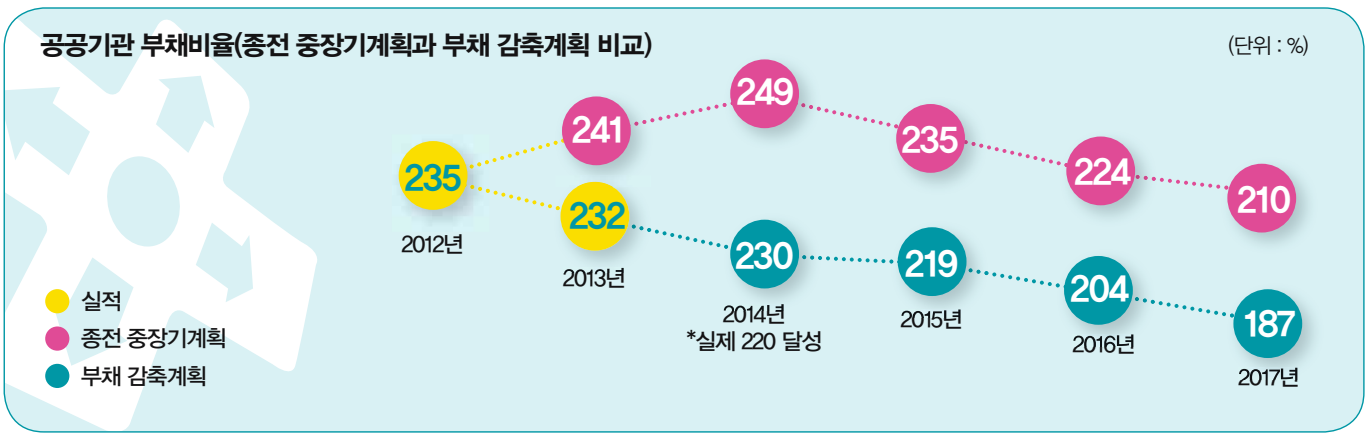
고용 세습, 과도한 경조사비 등 비정상적인 경영 행태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고 부채를 감축하는 작업으로 공공기관 개혁을 시작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으로 재무건전성을 높이며, 일부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복지 혜택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했다.

공공기관 정상화 성과 가시화되기 시작

우선 공공기관의 부채와 걸맞지 않은 복지제도를 국민들 앞에 공개했다.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의 원인별, 성질별 부채 정보를 2013년 12월 공공기관 정보 공개 홈페이지인 '알리오(www.alio.go.kr)'에 전격 공개한 것이다.

이어서 유가족 특별채용, 휴직급여, 과다한 경조사비, 초·중등 자녀 학자금, 노조의 경영·인사권 침해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8대 방만 사례 대부분을 축소 조정하거나 폐지했다.

2014년 말 현재 302개 기관 중 290개 기관이 과다한 복리후생비 외에도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시키는 등의 불합리한 방만경영 사례를 모두 개선함으로써 향후 매년 약 2000억 원 수준의 복리후생비가 줄어들게 됐다. 1인당 복리후생비를 놓고 볼 때 2013년 314만 원에서 2014년 238만 원으로 76만 원, 24.4%가 절감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 8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10월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평가를 받았다.

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위해 2014년 4월 각 기관별로 강력한 부채 감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같은 해 10월에는 공사채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전격적이고 긴박하게 진행된 공공부문 개혁의 결과 2012년 235%에 달하던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2014년 말에는 220% 수준(계획 230%)으로 축소됐다. 2017년 말에는 200% 이내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는 '기업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정 신뢰도 수준이다.

부채관리 대상 공공기관은 중장기 재무계획을 작성해야 하는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의 41개 기관들로, 이들은 부채 감축계획으로 당초 중장기계획 대비 52조 원을 추가 감축하게 돼 자구 노력이 없는 경우에 비해 2014~2017년 사이 부채가 115조 원 추가 감축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은 자산 매각과 자발적 임금 동결, 경상경비 절감, 원가 절감 등 경영 효율화를 통해 지난해 1~8월 부채 감축계획 20조1000억 원 대비 4조3000억 원을 더 감축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한국전력공사는 부장 이상 임직원의 2013~2014년 임금 인상분을 자발적으로 반납해 부채 감축에 기여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향후 3년간 매년 부채를 감축하지 못하면 부장 이상 임직원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하는 등 강력한 부채 감축 방안을 도입했다.

"공공기관 혁신도 지속 추진해 부채를 줄여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4년 10월 29일)

이러한 강도 높은 공공개혁으로 1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 중 ▶이자보상배율 1.0배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 ▶당기순이익 흑자 등의 요소를 갖춘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은 공공개혁 초기인 2013년 6개에서 2018년 11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같이 뼈를 깎는 혁신의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주요 8개 공공기관은 2014년 10월 27일 발표된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사의 신용등급 평가에서 상향 조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2015년에는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개선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넘어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 내실을 다지는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

기관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동시에, 성과 중심의 경영·인력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조정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등에 대한 기능 조정계획을 올 4월 말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방만경영 사례가 복원되거나 잔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관이 지속적, 자율적으로 방만경영 개선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 보급,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국민 감시, 경영평가 확대 반영 등을 추진해 이제 첫발을 뗀 공공기관 정상화의 기틀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강력 추진

공공개혁으로 가는 발걸음은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에서도 분주히 이뤄지고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4개 국정과제와 함께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서, 국정 비전과 국정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 기본이 바로 선 국가 구현을 위한 구심점이다.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잘못된 제도와 규정, 불합리한 관행 등의 개선 없이는 국정 목표의 내실 있는 달성과 국민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과거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총 245개의 비정상 과제를 발굴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상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우선 지난 2013년 12월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 근절, 예산 낭비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제1차 비정상 과제 95개를 선정해 정상화에 힘써왔고,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 분야를 대폭 강화하고 실생활 불편을 집중 개선해 지난해 8월 제2차 150개 비정상 과제에 대한 정상화에 들어갔다.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 제도와 관행 등 과거의 적폐를 과감히 바로잡아 경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2014년 10월 29일)

이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2435억 원을 환수 중이고(2013년 5월 이후), 원전 비리사범 293명을 기소하는(2014년 9월 기준) 등 부패 고리를 단절하고 사회구조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 사망 말소자 등 복지 부정 수급자 140만 건을 정비하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복지, 노동, 중소기업, 농업, 보훈, 연구개발(R&D) 분야의 각종 보조금 관련 재정누수 근절에 힘써왔다.

더불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 생활 불편과제 또는 민생 관련 불법·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개선했다.

학교·어린이집·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대책, 재난 발생 시 112·119·122 간 범죄·재난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현장, 안전 제도나 안전의식을 혁신하는 등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 관행을 깨뜨리기 위한 정상화 노력도 지속해왔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일시적, 한시적 작업이 아니라 임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어젠다로 간주해 2015년에도 과제 발굴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정상화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으로의 정상화 확산도 유도할 방침이다. 대단위 사업으로부터 국민 생활 가까이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공공개혁의 성과들은 다음 단계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든든한 받침돌이 되어줄 것이다. G

방만경영 주요 개선 사례

학자금	초등 5~6학년 자녀 영어캠프비 70% 지원(한국도로공사)	폐지
	초·중생 1인당 스키캠프 30만 원, 초·중·고생 1인당 영어캠프비 63만 원 지원(한국마사회)	폐지
	예능계 중, 특목고·사립고 학비 전액 지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학교 폐지, 고등학교는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대학 입학 축하금 200만 원 지급(한국무역보험공사)	폐지
	대학생 자녀 학자금 2명까지 무상 지원(한국수력원자력)	장학금 제도로 변경
	대학생 자녀 학자금 300만 원까지 무상지원(인천국제공항공사)	폐지
경조사비·기념품	본인 생일, 명절 등 기념일에 1인당 105만 원 상품권 / 7년 근속자 외식상품권 20만 원 지급(그랜드코리아 레저)	생일 및 근속은 폐지, 기타 기념일은 지급액 축소
	결혼기념일 5년마다 10만 원, 3자녀 출산장려금 2000만 원, 본인 사망 시 2000만 원 지급(코스콤)	결혼기념일 폐지, 출산장려금·사망조의금 각각 100만·1000만 원으로 축소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에 상품권 70만 원 지급(한국거래소)	폐지
의료비	본인 의료비 500만 원 초과분에 대하여 연간 3000만 원 한도 지원(한전전력기술)	폐지
	직원 업무 외 질병, 가족의료비를 1500만 원(5대 질병 2500만 원) 한도 지원(한국거래소)	폐지하되 선택적 복지 포인트 활용
특별채용	업무상 재해로 사망, 퇴직 시 유가족 특별 채용(한국가스기술공사, 부산대병원)	폐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정년퇴직, 일반사망 등 이유 불문하고 유가족 특별 채용(한국예탁결제원)	폐지
	정년퇴직 시 직계가족 우선 채용(강원랜드)	폐지
과다한 특별휴가	업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최대 6개월까지 병가 운영(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퇴직 준비휴가 3개월 부여(JDC)	폐지
과다한 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경영평가성과급 반영(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폐지
	공상 퇴직 시 퇴직금 가산 지급(한국감정원)	폐지
	순직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한국감정원)	폐지
	공상 퇴직·순직 직원 유가족에게 10년간 매년 120만 원 및 장학금 지원(한국전력공사)	폐지
느슨한 복무 형태	일반직 유급(연봉 30%) 안식년 제도(중소기업유통센터)	폐지
	근무시간 중 체육의 날 매월 운영(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폐지
경영·인사권 침해	쟁의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한국연구재단)	폐지
	불법쟁의행위 민·형사상 책임 면제(한국고전번역원)	폐지
	조합원 신분 변동 시 사전 합의(한국지역난방공사)	'합의'를 '협의'로 변경
기타	사택관리비(80만 원/월 한도) 지원(한국정책금융공사)	폐지
	통신비를 팀장 월 7만5000원, 팀원 6만5000원 실비 지급(한국거래소)	업무용 휴대폰 외에 통신비 지원 폐지
	생활안정자금 융자(2000만 원 한도)(한국투자공사)	폐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부적정(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토요일을 무급으로 개정

공공부문 비리 척결 부정하게 새는 돈 막는다

국민 생활 피해 줄이고 혈세 낭비 방지



준공을 앞두고 원전비리에 휘말렸던 경주시 양남면 신월성 원전 2호기.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2013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건설 중인 신월성 2호기의 원자로에 시험성적표가 위조된 불량 부품이 사용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끈질긴 수사 끝에 시험성적을 조작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과 부품 납품업체 사이에 금품이 오갔고, 받은 금품을 대표이사에서부터 말단 실무진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나눠 갖는 '마피아'식 상납 구조가 한국수력원자력 내에 형성돼 있음을 밝혀냈다.

국가혁신과 관련한 지난 2년 동안의 정부 정책 성과 중 하나는 단연 우리 사회 전반에 공고히 뿌리 내린 부패를 강력히 척결한 것이다. 특히 국민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는 공공부문 비리의 근절과 함께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 수급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한 것이 두드러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사회지도층의 고액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엄정히 집행하는 등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으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는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통한 지하경제 양성화 및 국가세입 기반 확충과도 연계된다. 부정 청탁 등 부패 관행의 해소 또한 부패 척결의 주요 성과다.

정부는 원전·철도·해운·방위사업 비리, 복지 부정 수급에 따른 재정 누수 심화 등 사회 전반의 비리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고조됨에 따라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수사에 법무·검찰 역량을 집중할 정책적 필요성을 깨닫고, 그동안 대대적인 공공부문 비리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는 특혜와 편법이 없는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척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부문 비리 근절

정책 성과는 크게 공공부문의 민관 유착 비리 척결과 서민 투자 피해를 양산하는 주가 조작에 대한 엄단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민관 유착 비리 척결을 위해 2014년 5월 전국 18개 검찰청에 민관 유착 척결을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원전·해운·방위산업 등 공공 인프라 관련 비리에 대해서도 원전비리수사단(2013년 5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과 해운비리 특별수사팀(2014년 4월 인천·부산지검에 설치),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201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 등을 구성해 적극 대처해왔다.

이에 대한 주요 수사 성과로, 2014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공기관의 인사·납품 비리, 공금 횡령 등에 관련된 390명을 인지해 이 가운

데 256명을 구속하고, 철도 비리와 관련해서는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등에 개입한 54명을 인지해 이 중 25명을 구속했다.

또한 원전 비리에 대해선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에 관련된 157명을 인지해 이 중 41명을 구속했으며, 해운 비리 분야에서도 안전점검 서류 허위 작성 등과 관련해 271명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90명을 구속했다.

방위사업 비리 분야에선 납품 관련 금품 수수, 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위산업기술 유출 등에 개입한 118명을 인지해 이 중 18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민 투자 피해를 양산하는 주가 조작을 엄단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 2013년 5월 설치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2010년 이후 늘어나던 불공정거래 사건이 대폭 감소하는 등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왔다. 수사 성과를 보면, 2013년 5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287명을 인지해 이 중 138명을 구속하고 479억 원을 환수 조치했다.

또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해 사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금융당국에서 검찰로의 사건 이첩기간이 2012년 이전엔 1년 이상 걸리던 것이 2013년 이후엔 평균 3.5개월로 단축됐다. 또 검찰의 주가 조작 사건 처리기간도 2012년 이전 124일을 요하던 것이 2013년 이후론 78일로 짧아졌다. 이 덕분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도 2013년부터 대폭 감소했다(표 참조).

정부는 앞으로도 2014년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심각성이 부각된 방위사업 분야 비리 척결을 위해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또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민관 유착은 비단 해운 분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돼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2014년 5월 19일)

부정 수급, 시스템으로 차단

정부는 복지예산 등 재정 지출이 증가함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허위·부정 청구 관행이 잔존함에 따라 제도별, 부처별로 산재한 부정 수급 대응체계를 일원화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해 재정 낭비를 예방하며, 누수된 재정은 철저히 환수하는 등 허위·부정 청구 관행 척결에도 힘써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월 6일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보조금이 갖가지 부정 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바 있다.

정부는 2013년 10월 '정부 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부정 수급 적발액이 2014년 12월 현재 약 440억 원에 달하는 정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 변화 추이

구분(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6
금융감독원 접수 사건	205	235	194	222	271	184	60
금융감독원의 검찰 이첩 사건	115	142	138	152	180	146	68

동아DB


동아일보

일당 5억 원의 이른바 '황제노역'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14년 4월 광주지검 현관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성과를 거뒀다. 신고센터 설치 이후 접수된 신고 건수는 932건으로, 이 가운데 21.6%인 201건을 조사·감독기관으로 이첩·송부하고, 201건 중 조사가 종결된 115건에 대해선 약 49억 원의 환수를 확정했다. 신고센터 설치 후 복지 부정 신고는 14.8배, 부정 수급 환수 예정액은 15배 증가했다.

정부는 허위·부정 청구 시 징벌적 환수 등 종합적인 부정 수급 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을 마련하고, 2014년 10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대국민 입법예고를 했으며, 올해 1월 9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마쳤다(상자 기사 참조).

정부는 올해 1월 6일 정부 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업무 영역을 보조금 전 분야로 확대하고 정규직제화하여 명실상부한 부정 수급 종합대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2015년도 관련 예산은 1억 1400만 원으로, 부정 수급 신고 처리에 4300만 원, 신고 관련 저변 확대에 3800만 원, 신고센터 운영 예산에 3300만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또한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법제처의 법제 심사 등 정부 내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은닉 재산·황제노역 '어림없다'

정부는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강제집행 강화를 위해 2014년 4월 전국 검찰청에 '재산 집중추적·집행팀'을 설치하고 은닉 재산 등의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적극 나서 같은 해 11월까지 836억 원(벌금 458억 원, 추징금 378억 원)을 환수했다.

특히 2013년 6월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팀 활동을 통해 추징금 징수를 적극 추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 원 가운데 554억 원에 대해 강제집행(1703억 원 압류)을 해놓은 상태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징수 작업은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 220억 원을 집행한 데 그쳤지만, 현 정부 출범 후 전담팀을 구성해 미납 추징금 전액에 대해 재산을 압류하고 환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집행 실적이 대폭 늘었다.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미납 벌금 224억 원에 대해서도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전액 집행 절차가 이뤄졌다. 이는 전국 검찰청의 '범죄수익환수반'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환수 노력을 강화한 결과다.

정부는 또 고액 벌금·추징금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책으로, 1억 원 이상 고액 벌금 선고 시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2014년 5월 시행)을 통해 선고하는 벌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 1000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범죄수익 환수 강화를 위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2014년 11월 19일 시행)해 다중 인명피해 사고 발생에 형사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개정법상 추징 판결은 악의의 제3자 명의로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토록 하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의 도입 등 재산 추적 수단도 강화했다.

고액 벌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2014년 12월 3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여기엔 벌금 추징을 위한 압수수색 등 재산 추적 수단을 보완하고 벌금 미납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추정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부끄러운 말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앞장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법의 날' 기념식 발언 (2013년 4월 25일)

정부는 앞으로도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 '범죄수익환수반' 등을 중심으로 고액 벌금, 추징금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부정 청탁 등 부패 관행의 해소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부패를 뿌리 뽑고 개혁을 선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고·온정주의에 기댄 알선·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없는 금품 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으며, 부패 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관행을 개선해 처벌 수준을 정상화함으로써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의 80% 이상이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이행하도록 유도해왔다. 박 대통령도 2013년 9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고 법에 적힌 대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수많은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의 정책 성과로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방문 설명과 당정 협의, 공익광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1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한 2014년 4월엔 징계 강화 및 임의적 감경 금지 등 '부패 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이 권고됐다.

2014년 12월 현재, 부정 청탁 관련 집중 관리 대상인 256개 주요 기관은 권고 과제의 90.9%(2261개 중 2056개)를 이행해 목표치를 10.9% 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정부는 향후 법안 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입법 지원활동을 적극 펼치고,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권고사항의 실제 작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 처벌 정상화 방안을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키로 했다. G

'한국판 링컨법'은

국민 신고 활성화… 공공재정 누수 근원적 차단

일명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공공재정 허위·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은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각종 공공재정을 지급받은 경우엔 이자를 포함해 전액 환수하고, 이에 추가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이 확정될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발주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2회 이상 및 부정이익금 3000만 원 이상인 상습적 부정 청구자에 대해선 이름(법인명) 등을 공개하는 명단공표제를 도입하게 돼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효과적 적발을 위해 신분 보장, 신변 보호 등 철저한 신고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패 척결을 위한 법규는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링컨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1863년 남북전쟁 당시 연방보급품 구매 과정에서 군수품 업자들의 사기가 잇따르자 이를 처벌하기 위해 부정청구금지법(일명 링컨법, False Claims Act)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정부 계약을 따내거나 재정보조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으로 현재 뉴욕주 등 32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영국도 2002년 범죄수익환수법(Proceed of Crime Act)을 제정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재산환수청을 설치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환수하고 있다.



불산 등 유독성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이 2013년 5월 7일 전남 여수시 여천석유화학단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열렸다. 화생방 테러와 유독물질 유출 상황을 가정하여 소방관서, 육군31사단 화학대, 방재기관이 합동으로 종합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DB

산업 현장 무재해 도전 '안전 선진국' 원년으로

원자력·화학 등 안전관리 체계적 시스템 구축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정부 합동 점검단의 고리·월성원전 현장점검 결과, 원전 제어시스템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고리와 월성원전을 대상으로 사이버 위협에 따른 운전 제어망에 대한 보안체계와 운전 안전성 영향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어시스템 네트워크상 외부 접속 여부, 제어시스템 및 사용 중인 휴대용 매체의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제어시스템 운영 건전성 등이다. 점검 결과, 원전 제어시스템으로 침입할 수 있는 외부 고정 접점은 없어 사내 업무망 및 사외 인터넷망과 분리된 것을 확인했으며, 제어시스템 등에서 사이버테러 공격에 사용될 수 있는 악성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원전 주기시험 결과, 운전기록 등을 통해 제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됨을 확인했다.

원전, 강화된 안전제도로 철저히 관리

이처럼 정부는 원전 비리를 차단하고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한다. 이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국내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책이 보완되면 사고 발생 시 정부의 대응능력은 물론 주민보호 역량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무엇보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비리 처벌 강화 등 사후 관리규제 기능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추진한다. 품질 서류 위조가 확인된 기기, 부품 공급자 및 성능검증관리기관도

정부의 원자력 안전규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령을 지난해 11월 개정한 것이다. 또한 법령 위반 시 과징금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50억 원으로 100배 늘리고, 원전 종사자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원전실명제를 도입해 시행한다.

한편 지난해 5월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원자력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안전법 및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뀌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 대상을 원전 사업자에서 공급자(원전 안전 관련 설비의 설계자 및 제작자)와 성능검증관리기관(원전 안전 관련 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를 검증하는 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공급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직접 검사할 수 있고, 원전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원전 사업자는 물론 공급자, 성능검증관리기관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칙을 받게 된다.

둘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을 '성능검증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공신력을 확보한다. 이는 원전 사업자 단체에서 수행하던 성능검증 관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함이다. 그 밖에 과징금·과태료 부과 상한액 상향(각각 최대 50억 원, 3000만 원), 방사선 안전 관리자 선임제도, 원전 비리 등에 대한 제보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시행한다.

방사능방재법과 하위 법령 개정에 따라 방재 인프라도 확충한다.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기존 단일구역(8~10km)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3~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30km)의 2단계로 세분화하며, 이와 연계해 갑상선방호약품, 경보시설, 환경감시설비 등 방재 기반설비를 보완한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방재 유관기관 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주기를 4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보호훈련을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10km에서 30km로 확대한다.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 경우 중립적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 협의조정기구를 두는 등 갈등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2013년 5월 28일)

정부는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한편 화학사고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 국민을 보호하는 노력을 경주한다. 이는 화학 산업단지가 노후화되고 화학물질의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재정비

먼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를 검토받아 원자력 안전성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수검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의 이행을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성을 강화하고 규제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일환으로 화학물질안전원과 6개의 주요 산업단지에 합동방재센터를 지난해 1월 설치했다. 이 같은 대응시스템 마련 이후 실질적인 사고 피해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화학사고 신고 건수는 2013년 대비 15%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는 60명(잠정)으로 10% 이상 하락했다.

특히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도약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난해 유해화학물질 현장 대응 담당자와 취급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대응과정' 등 7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화학안전 관련 교육과



픽사베이 DB

정부는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을 7개로 만들어 총 18회, 500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교육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수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 점검, 상황 전파, 보호장비 착용, 물질 현장 탐지, 방재 및 종합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했다. 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대비해 2300명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영세사업장 안전진단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과정을 신설해 총 9개 과정으로 확대하였고 화학물질 제조, 운반, 보관, 저장, 사용 등 다양한 취급자의 특성에 맞는 산업계 맞춤형 교육 시스템도 운영한다. 아울러 유역·지방 환경청, 소방·경찰서, 합동방재센터 등 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 특성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가 화학안전기술 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화학사고 방재 관련 연구개발(R&D)을 총괄하고, 방재약품 개발, 개인 보호장비 국산화 등 자체 연구를 추진한다. 사고대응기관을 대상으로 화학테러·사고 대응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취급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사업장 화학안전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가 참여한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도 지난해 4월 발족해 화학안전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학안전 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됐다. 화학물질 취급시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구 분	개정 이전	개정 이후
검사 대상	• 원전 사업자	• 원전 사업자 • 공급자(부품 및 기기의 설계자·제작자) • 성능검증관리기관
부적합 사항 보고 의무	• 없음	• 원전 사업자
		• 공급자(부품 및 기기의 설계자·제작자)
		• 성능검증관리기관
성능검증관리기관	• 원전 사업자 단체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
과징금·과태료 상한액	• 과징금 : 5000만 원	• 과징금 : 50억 원(원자력 분야) 5억 원(방사선 분야)
연구용·교육용 원자로 허가	• 과태료 : 300만 원	• 과태료 : 3000만 원
	• 건설 및 운영 통합 허가	• 건설과 운영 분리 허가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 없음	• 신설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 (방사선 투과검사 분야)	• 없음	• 신설(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의무)
포상금	• 없음	• 신설(1인당 최대 10억 원)

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중소업체는 투자금액의 3~7%를 세액공제 받고, 14억4000만 원을 융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위해 2017년 12월까지 5조 원에 달하는 투자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방충제나 김서림방지제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철저하게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화학안전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화평법은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15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 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또 제품 내 함유 가능한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함량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이 고시되면 관련 제품 생산·수입자는 기준에 적합하게 판매해야 한다.

아울러 화관법의 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 등이 구체화되고 전문 검사기관의 정기·수시검사와 지방 환경청의 지도·점검이 병행된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취급시설은 1년마다, 그렇지 않은 취급시설은 2년마다 전문기관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했다. 장외영향평가의 경우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착공일 30일 이전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향후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법 시행 초기 화학안전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1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등록, 심사 및 취급시설 안전진단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화학물질 시험기반 마련, IT 시스템 구축, 화학물질 배출 저감 프로그램 보급 등 화학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도모한다. G

한수원 – 울진군 합의 서명

원전 주변지역의 갈등 조정 성공 모델 창출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 울진군은 신한울원전 1~4호기 건설 관련 지원 방안에 합의하고 지난해 11월 21일 울진군청에서 서명식을 가졌다. 1999년 협상을 시작한 이래 15년 만이다. 원전 건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 정부·공기업 간의 오랜 갈등이 대승적 합의를 거쳐 마침내 해소된 셈이다. 이번 서명은 중립적 조정자의 도움 아래 주민과의 대화·협의, 이해관계자 다자 간 협상을 통해 국책사업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의서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북면종합계획을 포함해 울진군이 요구한 8개 대안사업의 일괄 타결 지원금액 2800억 원을 울진군에 지급하고 사업 주체는 울진군으로 한다', '울진군은 신한울 1~4호기 건설 사업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수원의 지원금은 향후 울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주민편의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대규모로 투자될 예정이다. 현재 울진군에는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으며 신한울 1호기와 2호기가 건설 중이다. 2022년이 되면 울진군에는 모두 10기의 원전이 가동돼 우리나라 원전 발전량의 상당량을 차지할 전망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서명식에 참석해 "이번 합의는 지난 1999년부터 오랜 기간 어려운 협상 끝에 일궈낸 값진 성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과 지역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상생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정부는 고질적인 원전 주변지역의 갈등 조정 성공 모델을 창출했다. 그간 원전 주변 갈등이 전국에 걸쳐 발생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것에서 획기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다. 모범적 갈등 조정 사례를 창출한 덕에 관계자 간 상호대화를 통한 갈등 조정 통합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갈등 조정에 대한 중요성은 2013년 5월 28일 제24회 국무회의에서도 지적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책사업을 시작할 때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 경우 중립적 갈등중재기구를 설치해 활용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한 상시적 협의조정기구를 두는 등 갈등관리시스템 강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사실상 이번 사안은 갈등관리시스템을 통해 해결됐다. 즉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갈등 조정 민간 전문가를 추천하고, 갈등 조정 전문가가 주관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지난해 8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열어 최종 타결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수원, 산업통상자원부, 울진군, 주민대책위원회 간 5자 협의체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운영됐으나 갈등 조정에 실패한 뒤 국민대통합위원회에 갈등 조정 지원을 요청해 극적으로 타결했다.

앞으로 정부는 갈등 민원을 빈번히 경험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정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번 타결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종합해 공직자 및 일반인 대상 갈등관리 교육자료 등에 반영해 활용할 계획이다.

소중한 국민행복 안전으로 굳게 지킨다

범죄 취약지역·치안 사각지대 최소화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 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2014년 5월 19일)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로써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11월 19일 출범했다.



BD 이동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5층에 국민안전처 현판이 새로 걸렸다.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자연·사회·특수재난을 관리하게 된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국민안전처로 일원화

국민안전처는 이전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이관받아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을 갖추고 '특수재난실'을 신설해 항공, 에너지, 화학, 가스, 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육상의 경우 현행 '중앙119구조본부' 이외에 권역별 특수구조대를 대폭 보강했다. 해상 분야는 기존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동해특수구조대'와 '서해특수구조대'를 신설할 예정이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담당인력 500여 명이 경찰청으로 이관되며,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 등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국민안전처로 이관해 항만과 연안의 해상교통 관제 기능을 일원화한다.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도 신설해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대통령 보좌 기능도 강화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난 예방에서부터 복구까지 모든 과정을 일사불란하게 준비하겠다"며 "재난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해 안전수칙과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신문고를 개설해 국민들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2월 3일 화장품 겉포장, 샘플에도 사용기간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안전신문고는 2014년 11월 25일 현재 접수된 1458건의 국민신고 가운데 1322건을 처리한 상태다. 전남 완도에 다가구주택 옆 '액화석유가스장치' 경계책이 설치되고, 서울 원효대교 낙하위험구조물 11개를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학교 안전점검도 강화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시설, 식품 등 포괄적인 점검이 지난해 11월에 시행됐다.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까지 115개 시·군·구에서 실시돼 치안, 교통, 재난 분야 등의 동네 안전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확인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 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2014년 5월 19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다음과 같은 로드맵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즉 노후 소방장비 교체에 1000억 원, 생활안전지도 확대에 38억 원, 국민신고 통합포털 운영에 5억 원을 반영한다. 또 국민신고 통합포털을 구축해 올 12월까지 국민 참여 안전신고를 활성화하고, 전국을 포괄하는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생활 속 안전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범죄 취약지역 개선
살기 좋은 안전지역으로

부산 사상구의 '우범 거리'. 빈집과 무허가주택이 밀집해 있고 골목길이 많아 언제든지 제2의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한시름을 덜었다. 거리 벽에 화사한 벽화가 그려지고 곳곳에 비상벨과 폐쇄회로(CC)TV, 경찰 캐릭터가 그려진 번호판이 설치된 덕분이다.

이처럼 정부는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작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민관 협업을 통해 개방형 셉테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디자인한다는 의미. 다시 말해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적 특징과 환경에 중점을 두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어두운 곳, 감시가 어려운 곳, 접근이 쉬운 곳, 인적이 드문 곳을 밝고, 깨끗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영국은 '범죄와 무질서 법'을 통해 주택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미국과 호주 등은 '셉테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주택 및 도시 설계에 범죄 예방 설계지침을 반영해 범죄를 감소시켰다.

정부는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요인을 제거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즉 범죄 대처 패러다임을 전환해 사후 개입이 아닌 사전적, 능동적 예방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결과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범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사회·문화 프로그램을 병행해 안전한 지역사회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62곳 가운데 환경 개선이 시급한 14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선정 지역은 서울 영등포·마포·노원구, 경기 구리·여주·부천, 충남 천안·논산,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제주에 걸쳐 있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역주민, 지방자치

〈표1〉 법무부 '셉테드 효과성 분석 결과' (2014년 12월)

지역	지역 만족도	범죄 안전 체감도
부산	12%p↑	16%p↑
대전	7.25%p↑	8.5%p↑
구리	12%p↑	8.5%p↑
논산	12.5%p↑	8.75%p↑
천안	27.3%p↑	8.1%p↑
부천	6.9%p↑	12.5%p↑

단체, 검찰 등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사업 설계 단계부터 실시, 평가까지 민간 의견을 반영했다. 그 결과 사업 후 주민들의 지역 만족도와 범죄 안전 체감도가 증가했다(앞 페이지 〈표1〉 참조).

셉테드 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업무보고를 통해 강조한 바 있다. 법무부는 "4대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같이 국민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불안을 줄이고, 안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셉테드 조치가 우범지역에서의 범죄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관련 정책도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포함한 법질서 실천운동의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3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지난해 14개 지역에서 실시한 시범사업의 효과성 분석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검증하고 우수 모델을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찰기관뿐 아니라 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해 신도시 건설과 재건축사업 등을 추진할 때 셉테드 방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셉테드를 통해 우범지역이란 오명에서 벗어난 부산 영도구의 해



연합뉴스

부산 사상구의 '우범 거리'가 셉테드, 즉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작업을 통해 희망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표2〉 특별 단속기간(2014. 9. 3~12. 11) 중 검거한 동네 조직폭력배 범죄 유형별 건수

구분	계	업무방해	갈취	폭력	협박	재물손괴	기타
건수	12,735건	4,487건	4,143건	2,068건	1,114건	473건	450건
비율	100%	35.2%	32.5%	16.3%	8.8%	3.7%	3.5%

돋이마을. 이곳을 찾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청학동 해돋이마을 셉테드 사업은 민관이 협력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사회를 조성한 대표적 모범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셉테드 사업을 전개해 주민 생활의 변화가 전국적인 릴레이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12 총력 대응체계 구축
높아진 현장 검거율

한편 정부는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총력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치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1일 제69주년 경찰의 날 축사에서 "경찰은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대해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 입장에서 신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업무 패러다임도 시대에 맞게 바꿔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의미에서다.

112신고 출동 패러다임은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12신고를 접수할 때 관할, 기능 구분을 탈피해 신고 현장과 가장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경찰관들이 가장 먼저 출동할 수 있는 112신고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곧바로 적절하게 대응하는 골든 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생활치안에도 치안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112 총력 대응체계의 성과는 속속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월 17일 출동 패러다임이 바뀐 뒤 중요 범인 현장 검거율이 136% 증가했고, 평균 응답시간이 0.71초에서 0.33초로 크게 감소했다. 한편 상습적인 폭력과 갈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협하는 동네 조직폭력배를 근절하고 공원, 통학로 등 일상 생활지역의 안전도 확보했다. 동네 조직폭력배 100일 특별 단속기간을 지난해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설정해 1만2735건의 범죄를 저지른 3136명을 검거하고 960명을 구속했다(〈표2〉 참조).

또한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4대 사회악에 대한 대응을 더욱 체계화하는 한편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시기별 테마를 선정해 역량을 집중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율의 객관적 지표를 보면 성폭력 미검률은 11.1%에서 5%로, 성폭력 재범률은 6.4%에서 5.4%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2.1%에서 1.2%로, 가정폭력 재범률은 11.8%에서 5.9%로 개선됐다. 또한 같은 기간 지문 사전등록제 등을 통해 실종아동은 2.4% 포인트 줄고, 여성안심귀갓길이 3379개소로 운영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안전 체감도가 1.8% 포인트 높아졌다.

앞으로 정부는 112 총력 대응체계 구축으로 높아진 현장 검거율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다. 노후된 112 내비게이션 교체비용 9억 원 등 112신고 대응 개선을 위해 15억 원을 배정하고, 성폭력 피해자 조사 시 지원을 위한 속기사 비용 8억여 원 등 4대악 관련 대응 업무에 경찰청 예산 102억 원을 편성한다. 또한 112신고 신속 대응을 위한 기동순찰대를 신설해 20개소로 늘리고, 경찰청에 성폭력대책과를 신설해 성폭력 대책을 총괄한다. G

헌법 토론… 착한운전 마일리지… 국민 법질서 의식 제고

법교육·교통안전·공익신고 등 통해 준법 생활화



대전교육청 제공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고교생들이 '청소년이 만드는 모의 법정'을 체험하고 있다.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지금부터 정평중학교 제1회 학생자치법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사무관이 시작을 알리고 과벌점자 3학년 1반 이명수(가명)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선다. 이명수 학생은 조끼 미착용 2회, 지각 4회, 교사 지도 불이행 1회로 총 벌점 11점을 받아 학생자치법정에 섰다. 선처를 호소하는 과벌점자의 발언 후 검사와 변호인이 대립한다. "이명수 학생이 사회에 나갔을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그때는 단순히 실수와 개선이란 말로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학교는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준비하는 곳입니다. 이명수 학생이 자신의 실수를 통해 변화했다면, 개선의 노력을 격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양측의 최후 변론이 끝난 후 배심원 회의를 거쳐 최종 판결이 난다. 이명수 학생은 다음 자치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하기 1회로 벌점 5점, 정문 지도 봉사 1회로 벌점 1점을 감경받았다.

"헌법 가치가 책에 머무르지 않고 생활 속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헌법 교육이 확산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핵심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발언이다. 학생자치법정은 학교 현장에서의 헌법 가치 및 법질서 교육을 위해 법무부 주관 아래 실시해왔다. 경기 용인시 정평중학교는 지난해 11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 우수 사례 경연대회'에서 중학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14년 기준 학생자치법정이 운영되고 있는 중·고교는 2238개교로 전체 학교의 40.7%에 이른다. 초등학교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중학생 생활법 퀴즈대회'는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봄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기르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는 법체험 프로그램이다. 2013년 1496명, 지난해에는 59.4% 늘어난 2385명이 참가했다. 법무부는 '청소년 法사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헌법사랑 글짓기대회, 헌법 토론대회 등 5개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체험형, 참가형 9개 법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국민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안전혁신과 잘못된 관행·부패 적결을 통해 국가 재도약의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2014년 8월 19일)

솔로몬로파크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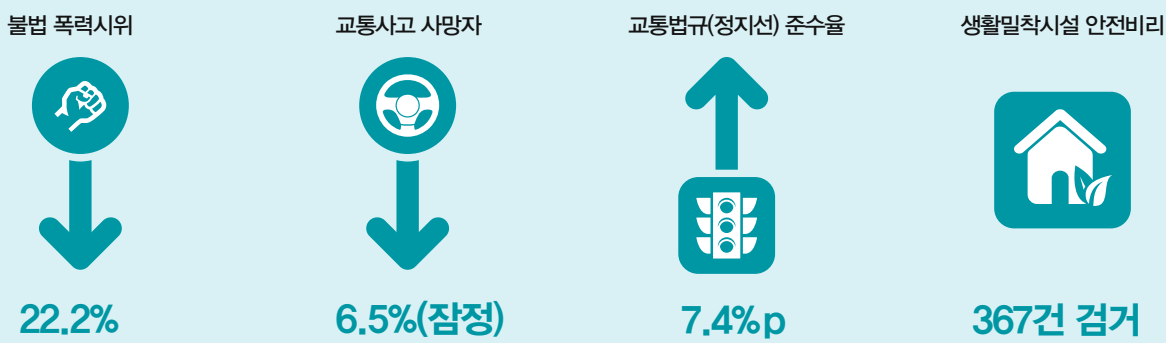
'헌법 토론대회'는 2013년 23개교에서 시범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255개 중·고교가 참여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헌법사랑 글짓기대회'는 지난해 중·고교로까지 확대해 총 5162편이 접수됐다. 이를 포함한 11개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9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결과, 법의식이 참가 전보다 9.12% 향상된 것으로 나왔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8%를 뛰어넘은 수치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법교육 테마파크인 '솔로몬로파크'는 학생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준법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곳에는 입법 체험실, 선거 체험관, 사이버범죄 예방코너 등이 마련돼 있어 직접 법 관련 체험을 할 수 있다. "법에 대해서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밖에 몰랐다. 국회의원은 만 25세부터, 대통령은 만 40세부터 출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좋은 법교육이 됐다." 가족과 함께 이곳을 찾은 이승주(가명, 주부) 씨는 이같이 방문 소감을 전했다.

솔로몬로파크는 학교 현장에서의 법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사 직무연수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위원 교육도 실시한다. 지난해에만 27만 명이 방문한 솔로몬로파크는 올해 말 부산에도 문을 연다.

정부는 2015년 법교육 예산 15억 원을 확보했다. 법무부와 교육

국민생활 관련 법질서 개선 성과(2014년, 전년 대비)



자료 :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부가 협업해 2015 문·이과 통합사회과 교육과정에 헌법 가치와 법질서 준수를 다룬 내용을 반영하는 등 청소년 대상 법교육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또 생활 속 법체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 로스쿨, 시민 법률콘서트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베트남 출신 팜피응아 씨. 대전시 최초의 결혼이민자 1호로 2013년 8월 1일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자로 시를 대표해 참여했다. 지역방송에서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하는 홍주희 씨. 울산지방경찰청 '교통법규 준수 모범시민' 1호로 서약에 참여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후 교통법규 위반 감시 활동으로 2013년 상반기만 600건을 신고한 배상철 씨는 광주시를, 44년간 충북 도내 최장기 무사고를 기록한 김의융 씨는 충북을 대표해 서약했다. 이 밖에도 축구선수 이동국(전북경찰청) 씨, 영화배우 정준호(충남경찰청) 씨, 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경찰청), 장만채 전남교육감(전남경찰청) 등 유명인사들이 시·도 경찰청 대표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서약했다.

교통법규 준수 운전습관 개선 효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마일리지 10점을 주는 제도다. 마일리지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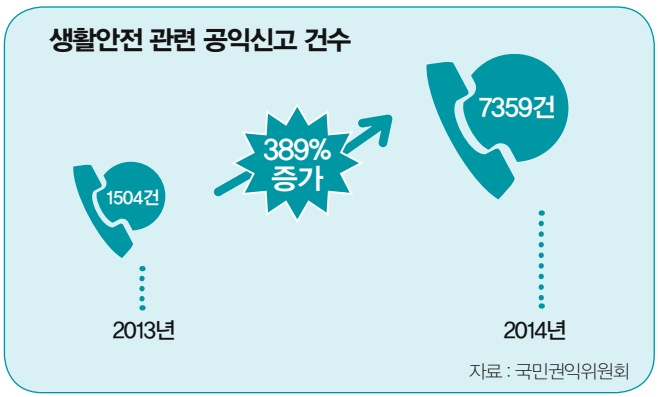
경찰청 교통안전과 이상로 총경은 "국정 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13년 정책 홍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해온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2014년 7월 31일까지 345만 명이 가입해 제도 시행 1년 후까지 263만 명(76.2%)이 서약을 지켰다. 특히 시행 첫날 서약한 22만9985명 가운데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한 15만8864명(69%)은 최초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았다. 또 평소 위험운전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로 조사된 16만2690명 가운데 6만3729명(39.2%)이 서약 후 1년간 안전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운전습관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공익신고 및 착한운전 마일리지 확산 등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율도 개선됐다. 2013년 80.1%에서 2014년 87.5%로 7.4% 포인트 향상된 것. 더불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5092명에서 4761명(잠정)으로 6.5% 감소했다. 37년 만의 최저수치다. 이는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호구역과 신호운영체계 등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도 교통안전을 위해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예산은 924억 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교통사고 원인 분석 등을 통한 교통안전 홍보영상 송출도 계속하기로 했다. 더불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등을 구매해 교통안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현황 및 서약 진행 사항은 인터넷 사이트(www.efine.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수년간 90여 건의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모 회사는 공익신고로 과태료 3억6000만 원을 물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이 기업체를 신고한 '국민 안전 침해' 신고 사건에는 보상금 4300만 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해 공익신고 단일 보상금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공익신고는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의약품 리베이트, 다단계 판매 등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더불어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 공익신고를 통해 피신고자가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 등의 벌과금을 부과받으면 부과액의 20%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확립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실시해왔다.

민간 불법 감시 강화
국민 건강과 안전 지키기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7359건에 달했다. 전년도 1504건에 비해 389%나 증가한 수치다. 2014년에 지급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3억9700만 원(657건)에 이르렀다. 신고 유형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행위가 총 5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억75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쌀 원산지, 생산 연도, 도정 일자 등을 허위로 표시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도·소매업자를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많은 136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공익신고는 민간의 불법 감시를 강화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익신고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고 이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다. 일례로 보상금 목적 신고자(파파라치)가 영세 상인에게 집중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보상금 지급을 적정화한 것. 1인당 연간 보상금 지급건수는 10건으로 제한하고, 보상금 지급 하한 금액은 10만 원 미만에서 20만 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 보장을 통해 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감사실 손병희 팀장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동차 내 행선 안내 게시기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하루 200회 이상 홍보해왔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손 팀장은 지난 1월 13일 열린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 부패 방지 부문에서 수상했다.

최근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공익신고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평소 휴대폰에 공익신고 애플리케이션을 받아놓거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를 이용하면 아동학대를 신속히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아동보호 분야 조사관이 처리하며 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 신고기간은 2월 28일까지다.

더불어 정부는 올 한 해 전방위적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도 공익신고 보상금에 예산 3억8000만 원, 공익신고제도 교육 및 제도 운영에 6800만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급식법, 해운법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법률도 추가해 향후 신고 대상을 현행 180개에서 280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공익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가능하다. G

공공정보 공개 '정부3.0' 국민 생활 업그레이드

공공데이터 이용한 민간 창업과 서비스 개발 뒷받침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6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길명 | 위클리 공감 기자

"정부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해나간다면 어려운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국민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3.0 비전 선포식' 발언(2013년 6월 19일)

공공정보의 소통 창구로 불리는 '정부3.0' 정책에 따른 변화가 국민의 삶에 속속 스며들고 있다. 정부3.0은 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공공정보·데이터 개방 소통·협업 활성화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창업과 서비스 개발 등 민간 이용을 활성화해 2017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5대 강국 도약, 공공데이터 개방 6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 정보 공개로 투명한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청구에 의한 공개에서 탈피해 청구 전에 결재문서를 연 1억 건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을 시행한 후 지난 한 해 창업기업, 대학생 등의 관심이 높은 1만3000여 건의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했다. 이를 통해 정부 데이터와 민간 아이디어가 만나 새로운 창업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대기오염 정보를 이용한 날씨 앱, 우체국 택배정보를 활용한 택배 앱, 화장품 성분 내용을 알려주는 앱, 서울 데이트 코스 안내 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국민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데이터 제공 신청권,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들쭉날쭉한 데이터의 개방표준을 제정했다. 전국 3만 곳의 주차장, 도시공원 2만 곳, 1700여 전통시장 등 11개 데이터의 표준화를 지난해 말에 완료했다.

앞으로 정보 개방은 민간이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수준의 원천정보 공개와 국민·기업이 원하는 고가치 데이터 개방 쪽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0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가 중점 개방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데이터의 표준 제정(30개), 원문 공개 확대 등이 추진된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통한 범정부 소통·협업 활성화로 정부 운영을 국민 중심으로 개혁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문화 서비스를 한곳에서 해결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개), 범정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합동방재센터(6개)를 구축하는 등 211개 협업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운전면허 신체검사 면제(연간 160만 명), 증빙서류 없이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아이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 등 72개 정보를 공유하는 성과도 냈다. 정부는 앞으로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클라우드 기반 구축, 통합재난안전체계 구축, 행정정보 공동 이용 확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정부3.0의 중요 개념은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과 그 정보를 공유해서 국민도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2013년 5월 14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정부는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알려주고 해결한다는 목표 아래 생활민원정보 통합 안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고도화, 범정부 중소기업 지원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국민 중심의 정보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부3.0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국민이 쉽게 피해구제를 받고, 기업은 분명히 책임지게 하는 새로운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피해액 입증 없이도 쉽게 배상(300만 원 이내)받을 수 있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를 신설하고, 고의로 정보를 유출할 경우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담고 있다.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대체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 핀'을 도입해 사회 전반의 주민등록번호 사용 관행을 개선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객관리 프로그램의 주민등록번호 입력창 삭제(11만7664건), 보호조치 컨설팅(577건),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1244건) 등을 지원했다.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5886개 공공 분야 홈페이지를 개선한 데 이어 인터넷상의 불법판매 게시글에 대한 삭제도 강화했다(2014년 6만7247건). 또

민원 경보제 단계와 발령 기준

단계	관심(1단계)	주의(2단계)	심각(3단계)
상황	집단민원 조짐 피해사례 다수 발생	민원 확산 징후 피해사례 지속 증가	급격한 민원 확산 피해 규모 확대
발령기준	• 피해·특이 : 주 30건 초과 • 갈등 민원 : 주 50건 초과	• 피해·특이 : 주 100건 초과 • 갈등 민원 : 주 200건 초과	• 피해·특이 : 주 200건 초과 • 갈등 민원 : 주 400건 초과
	'관심' 발령 후 →	2주 이상 지속 증가 →	4주 이상 지속 증가
		'주의' 발령 후 →	2주 이상 지속 증가

※ 경보 해제 : 민원이 해소·소멸되거나, 일정 기간 이상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경우

한 지난해 범정부 개인정보 대청소 캠페인을 통해 불법 수집 주민등록번호(14만 건)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3억5700만 건)를 삭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산 99억 원 등 올해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 예산에 209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3월 정보보호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제도 시행과 9월 통신사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할 방침이다.

민원 경보제로 집단갈등 해소

우리 사회는 갈등 양상이 점차 확장되고 복잡해지는 '생활 갈등'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관계기관에 알려 민원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집단민원을 해결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실현 방안으로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정부3.0 '민원 경보제'를 도입해 민원 평균 지속기간을 50% 이상 단축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유엔 공공행정상에 출품돼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지금까지 총 43건의 경보가 발령됐으며, 단계별로는 관심(1단계) 37건, 주의(2단계) 5건, 심각(3단계) 1건 등이다. 제도 시행으로 민원 평균 지속기간이 과거 5.2주에서 2.5주로 단축됐다.

또 장기 미해결이나 다수 기관 관련 대형 집단갈등 민원 총 46건이 조정·해결됐다. 40년간 미해결된 태백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 80년 묵은 구미 상미구교 확장 등이 장기 미해결 민원을 푼 사례다. 경북 고령군 우륵교 차량통행 요구, 천안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등은 다수 기관이 관련된 대형 집단민원 해결 사례다.

정부는 제도적 안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관 자율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 1분기 안에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운영규정(대통령훈령)에 민원 경보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7개 광역시·도 민원 빅데이터 공동 활용 및 분석 환경을 구축한다.

생활밀착형 정책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해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제안 공모를 통한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생활밀착형 정책으로 소통 확대 공론의 장도 활짝

일례로 10만 원 이하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처방전만으로 보험금(통원 의료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보험금 청구 시 비용과 시간이 대폭 절감돼 국민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면허증에 표기된 '지역명'을 '지역코드(숫자)'로 대체해 불필요한 지역감정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했다. '서울-91-000000-00'을 '11-91-000000-00'으로 바꾼 것이다.

더불어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학력, 직업을 기재토록 하거나 병원 진료 시 환자의 학력, 종교 등을 기록하는 사례 등과 같이 목적 외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관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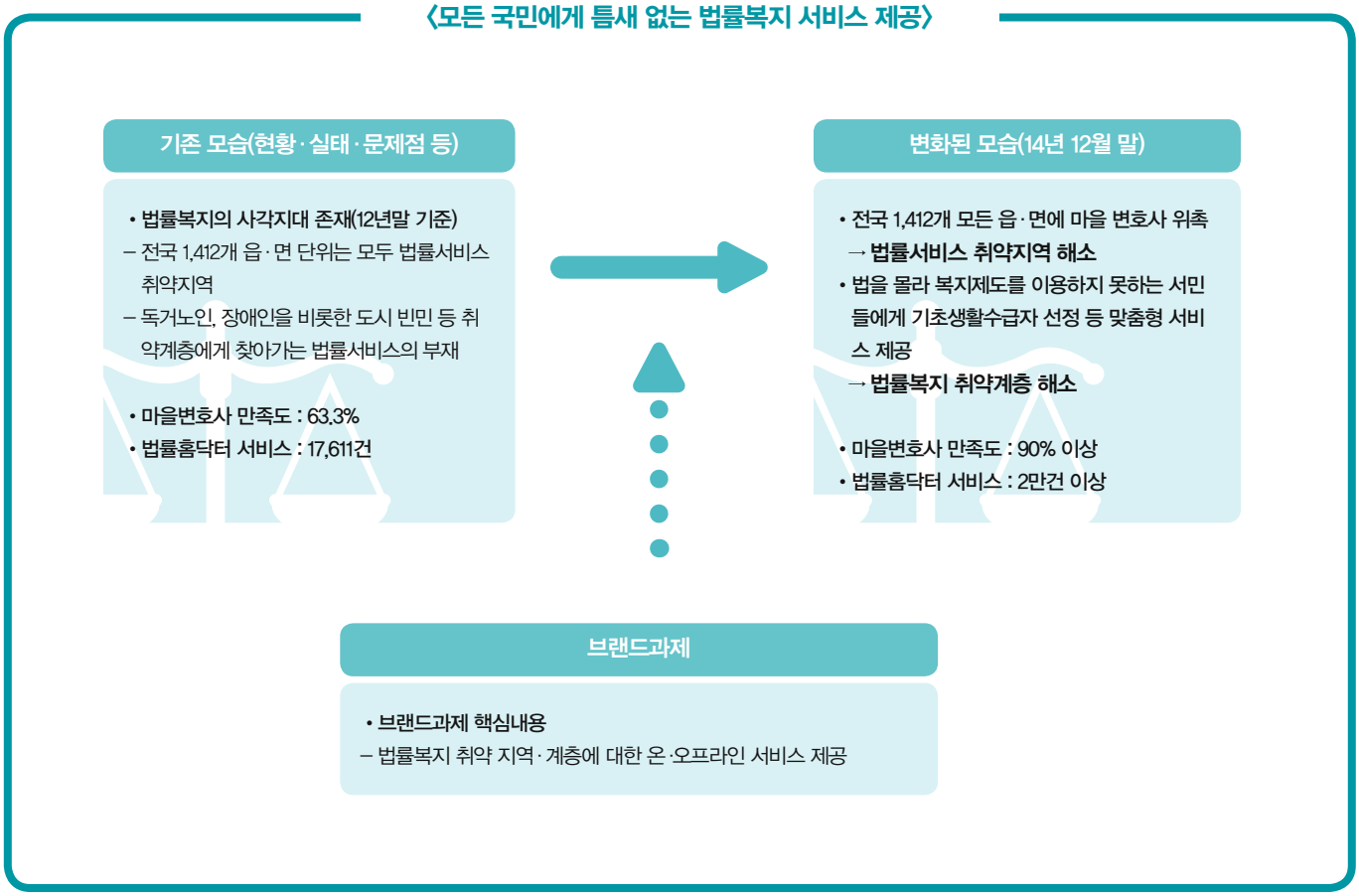
올 하반기에는 발급 빈도가 높은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를 '민원 24'와 연계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제안 공모전을 연 2회 주기적으로 실시해 갈등 유발 법령·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공론의 장도 활짝 열린다. 갈등 예방·조정에 기반이 되는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 모델을 제시한다. 또 국민의 관심사항을 파악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공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의제 선정과 토의에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종합토론회를 열어 우리의 미래가치 구현을 위한 5대 핵심 의제를 논의한 바 있다. 국민 대통합 미래가치 발굴,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저성장 시대 고용과 노동, 사회 갈등 완화와 양극화 해소, 미래 공동체 발전 방안 등이 그것이다.

또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4대 캠페인과 7대 실천덕목을 설정하고 범국민실천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4대 캠페인은 '한국인, 자랑스러워요', '이것만은 지켜요', '폭력과 막말, 이제 그만', '함께 나누면 행복해요' 등이다.

7대 실천덕목은 '대한민국 바로 알기', '사회지도층 솔선하기', '안



전·질서 바로 세우기', '존중과 배려하기', '폭력 추방하기', '욕설·막말 안 하기', '나눔과 봉사 실천하기' 등이다. 지난해 6월엔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을 기획해 '생활 속의 작은 실천, 나의 약속' 엽서 쓰기 캠페인과 월드컵·인천 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를 활용한 응원, 홍보 등을 진행했다.

정부는 앞으로 시민사회·종교계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국민 대토론회는 올 상반기 중 개최를 추진하고 '작은 실천 큰 보람 운동'은 선도적인 실천운동 과제 중심의 국민운동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변호사 2만 명 시대'임에도 80% 이상의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법률복지 취약지역·계층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정부는 누구나 무료로 손쉽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마을변호사의 경우 법무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제도 도입 1년 6개월 만에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변호사 배정이 완료됐다. 전국적인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도 구축됐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등과 긴밀한 업무 협조로 '법률홈닥터'가 장애인, 홀몸노인 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을 몰라 복지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지난 한 해 2만8967건의 법률복지 서비스(서류 작성, 기관 연계 등)를 제공했다.

정부는 올해 마을변호사에 1억5000만 원, 법률홈닥터엔 23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마을변호사의 경우 1차 법률상담에서 소송지원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구조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률홈닥터는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지속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관련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기 지도점검 및 실사를 통해 법률홈닥터가 필요한 잠재 지역과 수요 발굴에도 나설 예정이다. G

지역민 희망 북돋워 국민행복 큰 나무 키운다

지역 일자리 창출·지방대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인재 육성

박길명 | 위클리 공감 기자

정부는 '국민에게 행복을, 지역에 희망을'이란 비전 달성을 목표로 전국을 56개 지역 행복생활권으로 나눠 전국 어디서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또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발전을 주도하는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협의로 지난해 3월 전국에 56개가 구성됐다. 생활권 기반, 일자리, 복지, 문화 등의 분야에서 1475건의 생활권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충남–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전북–농·생명 허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향식 지역발전 추진전략인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맞춤형·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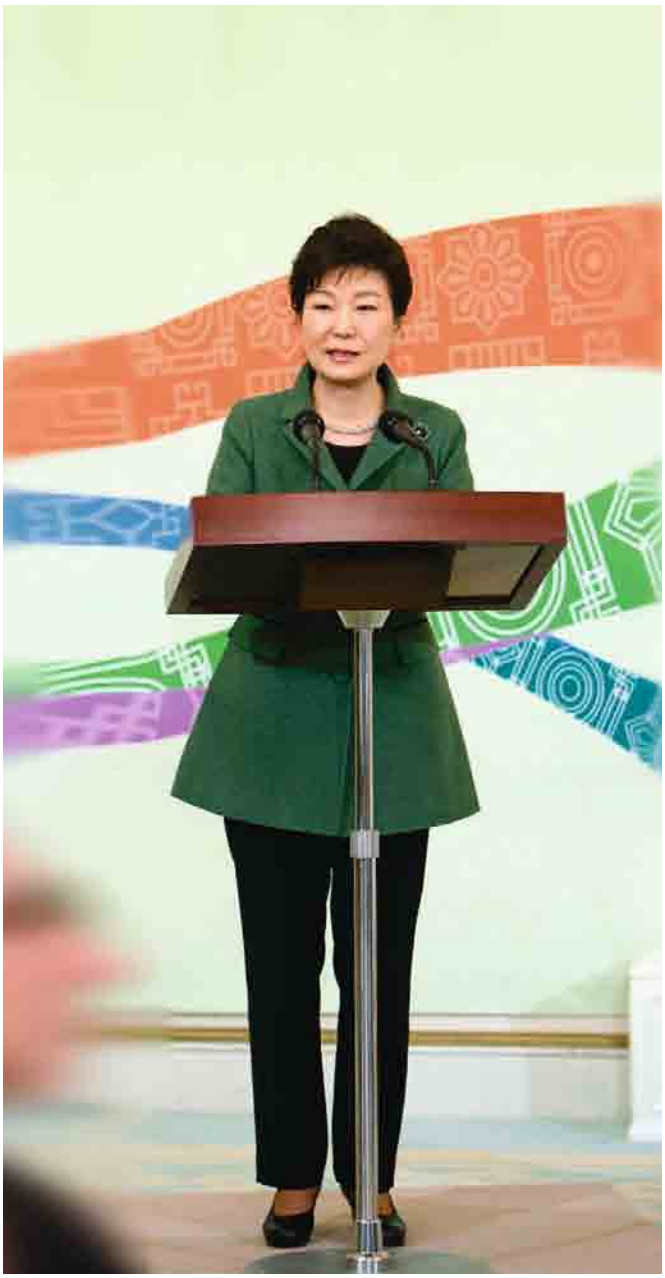
지역행복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또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의 추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시·도 공동으로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년)'을 수립해 지역생활권 활성화, 교육·의료·복지 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내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의 자율성이 제고되도록 복지·문화사업 등 포괄보조사업 예산도 지난해 3조6000억 원에서 올해 4조7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정부는 핵심 과제인 지역행복생활권,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요청이 많고 주민 삶의 질 개선에 효과가 높은 31개 생활권 중점과제에 대해 지난해에 비해 3000억 원이 증가한 3조4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5개 특화발전 프로젝트에는 5년간(2014~2018년) 총 2조 원(국비 기준)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지원 규모는 3500억 원에 달한다.

또 기존 사업 외에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농어촌 오지마을 및 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대학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지역들이 각각의 특성에 따라 발전하고 지역주민들이 각자 일터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워가는 것이 국민행복 시대의 출발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발언(2014년 3월 12일)



시 달동네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올해 5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역발전위원회 주도로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부처의 관련 사업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역 현장 방문, 워크숍 등을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과 컨설팅, 평가 등을 통한 지역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꾀할 방침이다.

재정정보 공개와 부채 감축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무리한 사업 추진, 민간보조금 관리 부실, 선심성 지원 등이 낳은 불건전 재정 운영 해소를 위해 지출 및 부채관리 강화, 주민 역할 강화 등으로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29일 개정 지방재정법 시행에 따라 투자 심사 대상을 확대(300억 원 이상→광역 200억 원, 기초 100억 원 이상)하고, 500억 원 이상 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정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전담해 실시하고 있다.

또 국제대회, 축제, 행사 등 대규모 지방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가 도입됐다. 지방 재정정보 공개도 확대됐다. 주민 관심항목인 지방채, 투자사업, 공기업 부채 현황 등을 중점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비교·평가를 위한 통합 공시도 법제화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재정 공시는 40건에서 46건, 행정자치부 통합 공시 항목은 9건에서 18건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부채 감축 노력 강화와 경영 효율화에도 성과를 냈다. 부채 과다 지방 공기업 26개에 대한 부채 감축 목표제를 도입해 부채비율을 2013년 158%에서 2017년 120%로 낮출 계획이다. 특별채용, 학자금 등 12개 비정상적인 복리후생 제도에 대한 개선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에 26억 원 등 6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2017년까지 지방 공기업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한편 2016년에는 지방자

"대학이 지역의 특성화 수요를 토대로 해서 다른 대학과 차별화할 것을 발굴하고 노력한다면 정부는 적극 도울 것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전국 대학총장 간담회(2013년 2월 19일)

치단체,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방 재정 전 과정을 공개할 방침이다.

지역민

복지·생활 개선

정부는 주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회복,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이에 주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기반이 구축됐다.

2011년부터 3년간 7000명의 사회복지인력 확충도 완료했다. 아울러 2017년까지 6000명을 추가로 늘려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또 지난해까지 소방 현장인력 확충으로 소방 3교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소방 서비스 질 개선을 꾀해왔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6년간 총 9607명을 증원해 소방 3교대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지난해 6월 현재 지방자치단체 소방직은 3만9768명이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1297개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생산적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에게 5만4813개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지난해 9월 '지방규제정보지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개혁 자율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지방·중앙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에 90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련에 239억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이 밖에 국민안전처 출범 등에 따라 소방 현장인력을 올해 2000여 명 증원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에서 갖는 역할과 기능을 감안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창조경제의 주인공으로 육성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에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대학 육성법을 시행한 결과, 지방대 취업률이 수도권 대학을 앞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대학의 연구 및 산학협력 성과와 실적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과 관련해 '특성화 사업단'과 수도권 대학에 버금가는 '특성화 우수학과'를 지정해 지원하고 지방대학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64개 특성화 사업단, 60개 특성화 우수학과, 10개 지역선도대학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이를 위해 지방대 특성화 사업에 2031억 원(2014년), 5년간 특성화 우수학과 지원에 총 500억 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총 1000억을 지원했다.

대학 특성화 사업은 대학의 융·복합 교육 등 우수 사례로 이어졌다. 또 특성화 전략에 부합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 구조 개편으로 산업 수요 맞춤형으로 특성화된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이 조성됐다. 지난해 7월 '지방대학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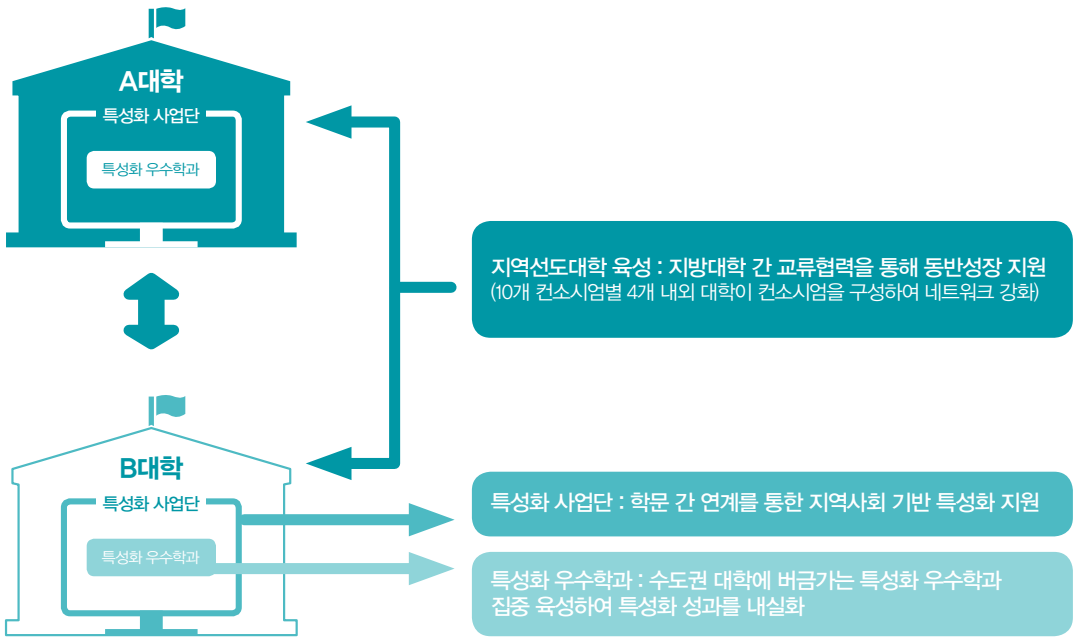
최근 경제 여건과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기반이 미약한 상황이다. 지방세는 재산과세 위주(44%)여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신장성이 낮다. 또 국가 시책 지원을 위한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은 증가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확대와 보조율 하락으로 지방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복지 수요 확대, 소방·복지인력 증원 등으로 재정 운영의 경직성도 심화되고 있다. 이에 경제 여건 변화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한 지방세제 개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충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성과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 자주권 강화를 위해 지방세제를 개편한 것이다. 지난해 1월 취득세 인하분을 상대적으로 신장성이 우수한 지방소비세 인상(부가가치세의 5% → 11%)을 통해 보완함으로써 안정적 세입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더불어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부가가치세의 10%)에서 독립세로 전환해 지방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했다. 또 지방세 감면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 수준(2013년 23% →2017년 15% 이하)으로 단계적으로 낮춰 지난해 8300억 원을 절감했다.

정부는 2016년 과세 누락 방지 등을 위한 '과세자료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지방세 감면도 정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으로 자주재원을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개념도〉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됐다.

지방대학 집중 육성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역인재의 입학 · 채용 기회 확대, 위원회(중앙) · 협의회(지방) 구성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위원회가 구성돼 지난해 12월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 위원회는 지방대학·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위원장)을 포함해 당연직 위원(정부 부처) 11명, 위촉직 위원(민간 전문가) 9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전면 시행으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도 확대됐다. 2015년도 수시전형 기준 67개 대학에서 723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했다.

지역인재 추천채용(7, 9급) 인원도 늘어 7급 수습직원의 경우 2012년 80명에서 지난해 100명으로 확대됐다. 고졸 이상 9급 수습직원도 올해 15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지방대학 육성사업과 관련해 2075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내 지역균형인재 고용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G

대학 특성화 사업의 융·복합 사례

- 건양대학교 = 창의융합대학(융합 정보기술(IT), 국제경영, 융합소프트웨어(SW), 의약바이오)과 기초교양교육대학(Liberal Arts College) 신설로 대학 체제 개편
-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간 영역을 없애고 자연과학과 공학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문화예술적 감성을 융합(Art&Technolog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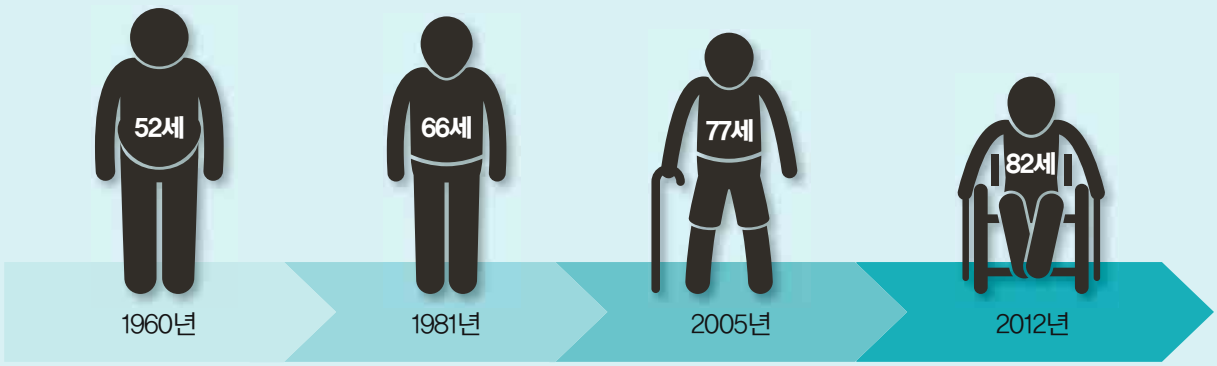
대학 특성화를 통한 학사 개편 우수 사례

- 중앙대학교 창의정보통신기술(ICT)공과대학 =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융합 교양학부(경제, 전통예술, 영문학 등)를 통합해 자기주도형 융합대학을 신설, 혁신적 공학교육 모델 제시
- 한양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과 = 기계, IT, 전자, 전기화학을 합쳐 미래자동차 핵심 기술을 선도할 융합형 글로벌 엔지니어 양성 체제로 학사과정 개편

“지금 하지 않으면 파탄… 공무원연금 개혁은 시대적 과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 거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심의·의결키로

높아져가는 평균수명(연금 수급기간 장기화 요인)



자료 : 인사혁신처

박경아 | 위클리 공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5일 인사혁신처 출범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다”며 전 부처가 공무원연금 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1월 12일 2015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공개혁의 하나로 “공무원연금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올해 3조 원, 10년 후에는 10조 원으로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대로 방치하면 484조 원, 국민 1인당 945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빚을 다음 세대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라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학회, 언론, 시민단체 토론회 등에서 제기한 다양한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검토 의견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159명) 명의로 지난해 10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여야 합의로 12월 29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국회의원·공무원단체, 외부 전문가들로 ‘국민대타협기구’가 구성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원래 100일이나 여야 합의 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최장 125일이다.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로드맵에 따르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올해 3월 28일까지 단수 또는 복수의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제출하면, 특위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제안한 개혁안을 적극 반영해 2015년 4월 7일(100일 기준 시·연장 시 2015년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논의를 적극 지원키로 했으며, 공직사회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최근 제기된 궁금증과 오해를 풀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 인터넷 홈페이지에 Q&A를 게시했다.

Q1_ 공무원연금 왜 개혁해야 하나?

첫째, 정부 보전금(연금수지 부족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매달 내는 돈(기준소득의 7%)과 정부가 동일 비율로 내는 돈(보수예산 7%)으로 현재 퇴직

한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최근 고령화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급증하여 공무원과 정부가 매달 내는 돈으로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부족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그간 불균형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의 재정 부담이 가중돼 2001년 599억 원이었던 보전금이 2014년 2조4854억 원으로 급증했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에 격차가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 시각에서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보다 많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 시각으로는 공무원은 보수가 낮고 퇴직금이 적어 국민연금과의 단순 비교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더 투명한 비교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연금 개혁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요 과제이기도 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해 국민의 재정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높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동시에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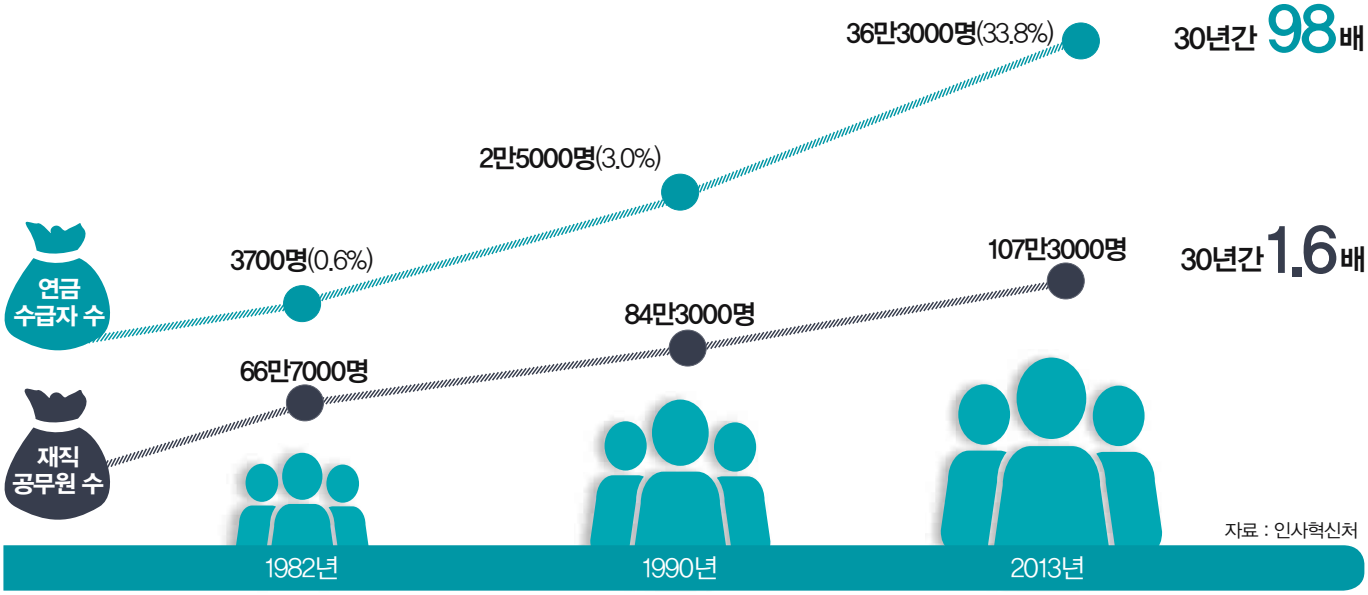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려운 국가 재정과 연금 재원을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 제51회 국무회의 발언(2014년 11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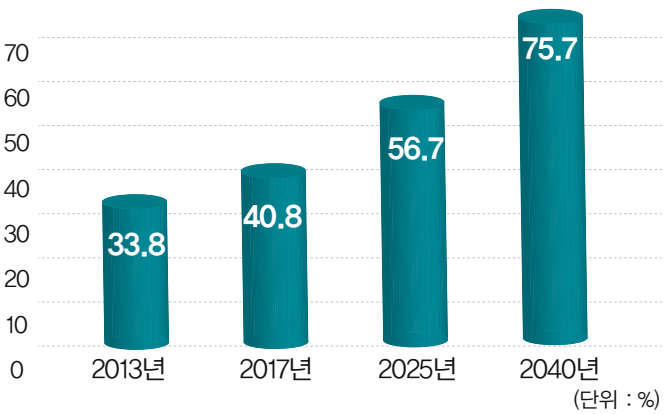
Q2_ 공무원연금 재정 악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급여수준(지급률)에 비해 부담률이 낮은 '저부담·고급여' 수지구조가 장기간 유지돼왔기 때문이다. 연금 지급률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재직 공무원(괄호 안은 부양률) * 부양률 = 수급자 수/재직 공무원 수



공무원연금 부양률 전망 * 부양률 = 수급자 수/재직 공무원 수



자료 :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개혁' 인터넷 홈페이지

(33년 재직 기준)은 연금 도입 당시(1960년) 46%에서 65%(1967년), 76%(1981년), 62.7%(2010년)로 바뀌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인 반면, 연금 수익비(연금 총액/보험료 총액)는 과거 4.28배(1986년 임용자)이기도 했던 것이 최근까지도 2.37배(2015년 임용자)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와 저금리 기조로 연금 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도 원인이다. 공무원연금이 처음 도입된 1960년 한국인 평균수명은 52세였으나 2012년 82세로 크게 늘어났다. 여기에 저금리 기조로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30년간 무려 98배 증가했고(1982년 3700명, 2013년 36만3000명),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 재직자 수보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훨씬 빠르게 늘어 부양률(수급자 수/재직 공무원 수)은 30년간 56배(1982년 0.6%, 2013년 33.8%)나 증가했다.

Q3_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많은 격차가 있나?

일부 언론에서 지난해 국민연금은 월평균 84만 원, 공무원연금은 219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수혜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제기했으나, 연금보험료 수준(공무원연금 14% : 국민연금 9%) 및 평균 납부기간(공무원연금 31.7년 : 국민연금 약 20년), 수급 요건 등이 달라 일률적인 비교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지표로서 '연금 수익비(급여 총액/보험료 총액)'를 통해 두 제도를 비교해보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두 제도 모두 수익비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여전히 높은 편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익비 분석에 적용하는 가정, 퇴직수당과 퇴직금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연금 수급액만 놓고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Q4_ 공무원연금공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으로 연금 재정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공무원연금 재정 문제는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며, 기금 운용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저부담·고급여의 불균형 수급구조에 급속한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다. 공단의 기금 운용은 평균 이상의 실적을 실현하고 있다. 1982년 공무원연금공단 출범 이후 32년간 연평균 11.0%의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7.3%),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8.6%)보다 우수한 편이다. 또한 재정자금 예탁도 1982~1999년 평균 예탁금리 10.4%로, 같은 기간 정기예금 평균금리 9.6%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주식 투자로 최근 10년간(2004~2013년) 평균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구 분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제도 일반	도입 시기	1960년 1월 1일	1988년 1월 1일
	제도 성격	사회보험+퇴직금+인사정책	사회보험
	적용 대상	공무원	18세 이상 61세 미만 전 국민
부담	기여율	공무원 7%	개인 4.5%
	부담률	국가 7%	사용자 4.5%
	산정기준	기준소득월액 (과세소득)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연금 급여	연금 산정기준	• 2009년 이전 : 퇴직 전 3년 평균 • 2010년 이후 : 전 기간 평균	• A : 전 가입자 최근 3년 평균소득 • B : 개인의 전 기간 평균소득
	연금 산식	재직기간(33년 이내) ×1년당 지급률 * 지급률 : 2.1% → 1.9%(2010년)	1.5~1.2(A+B)(1+0.05n) * n : 20년 초과 재직기간
	연금 지급 개시연령	• 60세(2010년 이전 임용자) • 65세(2010년 이후 임용자)	• 61세(2013년~2017년) → • 65세(2033년 이후) * 5년에 1세씩 연장
	급여 제한	있음 (금고 이상 형, 파면, 금전비리 해임)	없음
	연금 인상률	물가인상률	물가인상률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33년	없음
	수급요건	20년 이상 재직	10년 이상 가입
운영 현황 (2013년 말)	재직(가입)자(a)	107만2610명	2074만4780명
	연금 수급자(b)	36만3017명	345만1862명
	부양률(b/a)	34%	16.6%
	적자 시점	1993년	2044년(예상)
	적립기금	8조3670억 원	426조9545억 원
	적립배수	0.88배	34.5배
	급여 지출액	9조4836억 원	12조3620억 원

자료 : 인사혁신처

5.7%의 운용 수익률을 실현했다. 참고로 공단의 최근 10년간 전체자산 수익률은 5.2%, 채권 투자 수익률은 5.6%다. 공단은 투자 전문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2011년 1명, 2012년 2명 확보해 주식운용팀에 총 4명의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고 있다. 또한 공단 자산운용위원회의 외부 전문위원 풀(pool)을 확대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고루 위촉·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투자 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자기자본비율(BIS) 등을 활용해 투자가 안전한 종목군,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운용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공단은 방만한 기금 운용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감사원 등의 실적평가, 기금존치평가, 감사 등을 받고 있으며 국회의 국정감사, 전문가·공무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고 있다. G

관련 홈페이지 : 공무원연금개혁 www.gepr.go.kr

신의 한 수




박씨 손녀 희정양 공무원 합격


어이~ 박가야!
이제 저 플래카드
좀 떼어라~


왜?
보기 좋구만~
부러우면
지는 거여~
헛이
헛이


어이쿠야!
좌변이 아직도
미생이네~


으윽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이러다 대마도
죽게 생겼잖아!


공무원연금
개혁이라...
안돼 안돼 안돼
무조건 안돼!


지금 안하면
크게 후회할 거라
그러던데 그거...
남이사~!
왜 멀쩡하게 있는
밥그릇을 뺏느냐고!!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다잖아!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도 크게 늘어났다잖아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금도 적자분을 메우느라
국민세금이 많이 들어간다는데~
연금 재정수지 부족액은 2014년 2조5천억원,
2015년 3조원 등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거라잖아~
몰라! 그런 거
복잡해서 난 모르겠고
우리 아랫목에 묻어둔
손녀딸 밥그릇을
뺏지 말아달라는 거지~!
허허 참!
왜 이리 꽉 막혔누~
매년 더 많이 채워야
하는데...
그 밥그릇을 누가 채워주고...
지금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은
결국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셈이라고
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기위해 그 부담을 후세대에
넘기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해?
그건 손녀도 결국 손해보는 일이야.
그러니까...
이 미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대마가 물리는 상황과
똑같구만~!
신의 한 수가 필요하겠어!
자! 이 수면
어떤가!
오호라!
완생이로세~~
국민행복시대

자금난 중소기업에 설 전후 18조1000억 원 푼다

설 성수품 28개 품목 특별 관리·안전사고 대비 비상근무 강화

정부가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2월 3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설 성수품 28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중소기업에 18조1000억 원을 지원하며, 설 연휴에도 의료 서비스나 저소득층 지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 남

정부는 설 성수품 28개 품목 특별 관리 등 설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통해 과일을 고르는 시민들.

두경아 | 객원기자

정부는 2월 2일부터 17일까지 설 성수품과 생활필수품 등 28개 품목에 대해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품목은 농축수산물로는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이다. 생활필수품은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 조사 대상이다. 돼지갈비와 삼겹살(외식), 찜질방 이용료 등도 조사 품목에 들어간다.

서민물가 안정

또 2월 2일부터 17일까지를 농축수산물 특별공급기간으로 정해 배추, 사과 등 15개 농축수산물의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6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하루 7.1톤을 공급하던 농축수산물이 이 기간 중에는 하루 11.1톤으로 늘어나 수요를 맞추게 된다. 채소나 과일류 역시 배추(6800톤), 무(5100톤), 사과(1만4450톤), 배(1만7000톤) 등 계약재배 물량과 비축물량을 중심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축산물도 농협도축장 등을 통해 명절 전에 집중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쇠고기는 기존 620톤에서 800톤으로, 돼지고기는 2374톤에서 2969톤으로 늘린다. 정부 비축량이 1만4000톤에 이르는 수산물 역시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조기, 천일염 등을 집중 방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직거래, 특별판매 행사도 확대한다. 총 2526개소에서 10~30% 할인을 유도해 설 성수품 알뜰구매를 확산

시킬 예정이다.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설 성수품의 시장별 구매비용을 공개해 최적 구매시기 등 알뜰 구매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현장 중심의 물가 안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물가대책 종합상황실(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을 운영해 소비자단체와 합동 점검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서민 지원 확대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1월 19일부터 3월 6일까지 설 명절 특별자금을 대출하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 공급 등을 통해 명절 전후 동안 총 18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4조1000억 원을, 일반은행은 12조3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설 기간 중 매출채권보험으로 외상매출채권을 1조1000억 원가량 인수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자금 대책도 내놨다.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에서 1조2000억 원의 신용보증 공급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긴급 운영자금(미소금융)을 49개 시장에 1곳당 1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통시장과 '1기관 1시장' 자매결연을 확산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도 촉진하기로 했다. 명절 특수기간 상품권 배송을 지원하며 취급 금융기관을 12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

전국 5개 권역별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유도, 대형 유통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판촉행사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도 막기로 했다. 아울러 2월 1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체불 근로자에게는 연 2.5%의 저리로 1000만 원 한도에서 생계비를 빌려준다.

또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원한다. 2월 9일부터 17일까지 관세 환급 특별 지원과 분할 납부 지원 등을 추진하고, 명절 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안전 대응체계 강화

설 연휴는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준비하고 피해가 큰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할 예정이다. 대형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비상근무단계를 강화하며, 한파 특보 시 한파대책종합상황실(지방자치단체)을 24시간 가동할 방침이다.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2~4월) 중 다중이용시설은 설 이전에 우선 점검하며, 초고층건물과 전통시장 등 3066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반을 가동한다. 대형마트·역·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 교통시설, 가스·전기시설 등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도 실시한다. 강풍에 취약한 시설물이나 여객선 소방·구명·항해설비, 승선자 관리 등을 점검한다.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거나 건설·철강·조선업 등 고위험 사업장은 전담 관리(4017곳)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마다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등 연휴 중 비상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연휴 중에도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한다. 전국 538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당직 의료기관과 당번 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한다. 안내는 전화(119, 129), 홈페이지(www.1339.or.kr, www.e-gen.or.kr)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정부는 먹을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함께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의 위생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대광고 단속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등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합동으로 투입된다. 또한 설 선물로 주고받는 건강식

품의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고 홍삼 농축액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설 성수품 거래가 활발한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판매 가격,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 현황 등도 점검한다.

1차 위반 시 시정 권고를 내리고 재차 위반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한다. 택배 서비스, 온라인 상품권, 설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상품과 해외 구매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분야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편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해 쓰레기 적체를 예방하고 쓰레기 기동 청소반 및 상황반을 편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 교통·수송대책 실시

설 연휴 동안 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교통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열차, 고속버스, 시외·전세버스,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늘려 운행한다. 평상시 대비 하루 평균 운행 횟수를 열차는 546회에서 616회로 12.9% 늘리고, 항공기는 461편에서 486편으로 5.4% 증편한다.

고속버스는 5216회에서 7103회로 36.2%, 연안여객선은 766회에서 908회로 18.5% 늘린다. 아울러 지·정체 예상구간은 우회도로 유도 등을 통해 교통량 분산에 힘쓰고, 갓길 차로 임시운영 등으로 정체를 완화할 예정이다. 2월 18일부터 22일까지를 항만특별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수출입 화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만운영 정보 시스템과 해상교통관제 업무는 정상 근무(24시간 교대)하고 예선, 도선 등 항만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한다. 유류·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일반 화물 등에 대한 정상 하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관(항만공사, 하역업체 등) 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원활한 성수품 수송을 위해 전국 세관을 24시간 운영해 수출입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며, 설 선물용 특송 물품이나 우편물 검사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2월 17일까지는 통행 스티커를 부착한 성수품 화물차의 도심 제한을 해제하고, 부당요금 청구나 운송 거부 등 화물 운송 질서 문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노숙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평소 하루 2끼에서 설 연휴에는 3끼를 제공한다. 무료진료소 또한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결식 우려 아동에게는



동아DB

정부는 설 연휴 동안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을 돕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모습.

연휴 중에도 급식이 중단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며, 이웃주민 및 시민단체 등과 지원 대상 아동을 사전 연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설 연휴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 가출 청소년 보호 및 여성 폭력 피해자 상담이나 긴급 위기 지원 등도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새 학기에 맞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기숙사를 확충하거나 학자금 대출 금리 2.9% 유지 등으로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장학금(3조900억 원)과 대학 자체 재원(3조1000억 원) 등 총 7조 원을 활용해 등록금 경감 비율을 지난해 48%에서 올해 50%까지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대상으로 방문, 기부, 봉사, 나눔 캠페인 성금 모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비수도권 소재 시설의 홀몸노인 등에 대한 위문과 봉사활동을 강화한다. 일회성 격려 방문이 아니라 기관 내 부서 단위별로 시설과 결연하는 등 자생적 봉사조직을 활성화시켜 정기적인 자원봉사와 후원이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모은 성금 11억 원을 저소득 가정이나 홀몸노인 등 33만 명의 소외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 기초·차상위계층을 위한 통합 문화 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를 설 명절 전

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앞당겨 지원한다.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는 112만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에 발급하도록 했다. 설 연휴 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관람 및 국립국악원 등 설 공연 객석 나눔 행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G

알아둬야 할 긴급 전화번호

응급 구조	
응급 질병상담 및 병원 안내 119	화재·응급환자 119
당번약국 119, 129, www.pharm114.or.kr	산업재해 등 위험상황 신고 1588-3088
신종 인플루엔자 상담 및 문의 119, 129, 1588-3790, 1577-1000	
교통정보	
종합교통정보 안내 1333	고속도로 안내 1588-2505
철도 안내 1544-7788	
고속버스 안내 (경부선)1544-5551, (호남선)1588-6900	여객선 문의 1544-1114, island.haewoon.co.kr
소비자 피해 상담	
한국소비자원 신속대응반 02-3460-3132, 3137	농축산물 할인판매 안내 1588-0028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1588-8112	수산물 할인판매 안내 1588-3355, 1666-3566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1899-2112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체불임금 등 상담	
체불임금 구제 1350	무료법률구조 지원 132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1588-0075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 상담	
중소기업 종합상담 1357	중소기업 자금 지원 02-769-6700
중소기업 법률상담 02-3418-9988	소상공인 지원 1588-5302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서울권 02-2110-6149/6167	부산권 051-460-1041
광주권 062-975-6841	대전권 042-481-8018, 044-200-4603
대구권 053-230-6344	
생활 민원	
희망의 전화(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129	아이돌봄 서비스 1577-2514
법률상담 132	금융 관련 상담 피해구제 1332
실종아동 신고 접수 182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여성긴급전화 1366(이주여성 : 1577-1366)	환경신문고(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128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국민권익위원회) 110	

설맞이 직거래 장터·특별판매 현황

우리 농산물 대축제(2월 2~17일)
중앙회 및 계열사 유통사업장 62개소 및 농·축협마트에서 성수품목 할인 판매. 제수용품, 과일·한우 선물세트 할인 판매(10~30%)

지역별 내 고향 농축산물 및 제수용품 직거래 장터(2월 3~17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및 전국 농협(시·군지부 등)에서 신토불이 창구와 연계해 농·특산물 판매

'바로마켓' 설맞이 특판 행사(2월 10~17일)
과천 경마공원에서 선물세트 및 제수용품 150여 품목 시중보다 싸게 판매

축산물 이동판매 행사(2월 17일까지)
아파트단지, 시·구청, 정부청사, 마사회 등에서 한우, 돼지고기 10~30% 할인 판매(가축질병 발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농·임협 계통 판매장 특판 행사
농협 하나로클럽 등 전국 2095개 매장에서 제수용품 등을 시중 가격보다 10~20% 싸게 판매. 산림조합 임산물 직매장 95개소에서 제수용품 5~20% 할인 판매

수산물 직거래 장터(2월 2~17일) 수협중앙회, 바로마켓(과천) 등

수산물 특판 행사(2월 2~17일) 전국 수협바다마트(17개소) 등

인터넷 수산시장 특판 행사(2월 17일까지)
인터넷 수산시장(www.fishsale.co.kr),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에서 굴비, 옥돔, 고등어, 갈치, 전복 등 100여 개 상품 판매

제사상 밤·대추, 올해는 얼마?

밤 | 지난해 밤 생산량은 6만800톤(추정치)으로 기상 여건 악화와 산지 가격 하락에 따른 수확기피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5~7% 감소했다. 그러나 재고 누적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로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밤의 소비자 평균가격은 1월 기준 1kg당 7330원이며, 최근 3년간 설 전후 가격 추이를 비춰볼 때 올 설 성수기 밤 가격은 1kg당 7300~8300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대추 | 2015년 1월 소비자 평균가격은 1kg당 1만8350원으로 지난해보다 4.6% 높게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설 전후 가격 추이를 감안할 경우 설 성수기의 대추 가격은 1kg당 1만8000원~1만9000원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2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산림마트, 수원센터, 푸른장터(www.sanrim.com) 등 95곳에서 제수용품 특별코너를 마련해 밤과 대추, 고사리 등을 시중 가격보다 5~2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어르신! 고령農 복지 달력이 나왔습니다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달력 배포… 설 귀성길에 갖다드릴까?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영농작업 중 경운기 사고를 당해 2주간 병원에 입원 중이던 최 모(70) 할아버지는 한시가 급한 농작물 수확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막했다. 마을 경로당에 모인 할머니들은 기초연금 수급자인 박 모(66) 할머니가 생활비에 보탬이 될 소일거리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일자리 찾기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두 어르신의 고충은 이내 해결됐다. '달력' 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고령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알찬 복지 서비스 내용을 담은 2015년 달력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이하 '복지 서비스 달력')를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배포 중이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해당 계층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것. 즉 고령농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알게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달력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2013년 농·어업인 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는 35~40%에 그치는 실정이다.



15개 복지 서비스 내용·신청 방법 수록

복지 서비스 달력엔 영농·가사도우미 지원과 연금보험료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복지사업 6개와 보건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타 부처 사업 9개 등 영세한 고령농에게 필요한 15개 복지 서비스의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이 수록됐다. 각 사업의 주요 내용을 큰 서체로 인쇄해 어르신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이 달력은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로당과 홀몸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 가구를 주 대상으로 1만 부를 배포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곽기형 사무관은 "복지 서비스 내용을 큰 서체로 인쇄하고 지원 내용과 문의처 등은 간략히 기술하는 등 '수요자 중심 행정'이라는 정부 3.0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복지 서비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제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음력과 12간지(干支) 등도 수록해 어르신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복지 서비스 달력은 위클리 공감 블로그(koreablog.korea.kr)에서도 쉽게 내려받을 수 있다. G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201-1574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1.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2016년부터 농업인 확인을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통일 예정 – 현재 농지원부도 활용 중)
- 지원내용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50% (복지부 경감분 22% 포함 시)
-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농어업인 확인서 작성 · 확인 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문 의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 기초연금

- 지원대상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의 어르신 (2014년 경우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 원 수준)
- 지원내용 지원대상 중 대부분(90%)의 어르신께 월 20만 원 지급, 국민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은 10만~20만 원 지급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 수령시 최소 2만 원까지 차등 지원)
- 문 의 처 읍 · 면 ·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1355)

3. 농지연금

- 지원대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 3만㎡ 이하인 65세 이상인 농업인
- 제도내용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농지 가격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을 연금으로 지급, 종신형과 기간형(5,10,15년) 선택 가능
  ＊연금을 수령하며 경작 또는 임대 가능
- 신청방법 가까운 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 문 의 처 한국농어촌공사 (☎1577-7770)

4. 영농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여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농업인
- 지원내용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 지원 (최대 4만 2000원/일), 연간 10일 지원
- 신청시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상해진단 기간 내
- 문 의 처 지역농협 농식품부 콜센터 (☎1577-1020)

5. 가사도우미 지원

- 지원대상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가구 및 농촌지역 경로당 (2015년 1만 5000 가구)
- 지원내용 가사서비스(청소, 세탁 등)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원, 연간 최대 12일 지원 (경로당은 최대 24일 지원)
- 문 의 처 지역농협 농식품부 콜센터 (☎1577-1020)

6.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 지원대상 장외요양등급 외(A 또는 B) 판정자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65세 이상인 어르신
- 지원내용 방문서비스(식사도움, 외출동행, 목욕 보조 등), 주간보호(물리치료, 가족교육 및 상담 등), 단기 가사(청소, 세탁, 취사 등) 서비스 제공
- 문 의 처 읍 · 면 ·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7.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 지원대상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
- 지원내용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전확인, 운동 · 영양관리, 생활교육 등 서비스 제공 (주 1회 방문 및 2~3회 전화 확인, 월 2회 교육)
- 문 의 처 읍 · 면 ·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8. 노인 틀니 지원

- 지원대상 75세 이상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일부(부분 틀니 대상) 또는 전부(완전틀니 대상) 없는 어르신
- 지원내용 틀니 시술비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문 의 처 가까운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9. 노인 임플란트 지원

- 지원대상 치아 일부가 없으신 75세 이상 어르신 (2015. 7월부터는 70세 이상)
- 지원내용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시술비 본인부담률 : 일반 50%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문 의 처 가까운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10. 치매 치료 지원

- 지원대상 60세 이상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어르신(2014년의 경우 483만 원)
- 지원내용 **치매 치료** – 치매치료를 위한 약제비 및 진료비 중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
  치매 검진 – 보건소에서 치매검사 무료실시,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 일부 지원
- 문 의 처 가까운 보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11. 농촌 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

- 지원시설 어르신들의 공동주거시설, 읍 · 면지역 목욕탕, 마을 급식시설
- 지원내용 2015년 공동시설 71개소 (공동주거시설 35개소 , 공동급식시설 20개소 , 목욕탕 16개소) 확충
- 문 의 처 가까운 시 · 군, 농식품부 콜센터 (☎1577-1020)

12.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 지원대상 산간 도서벽지 등 의료 • 문화 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 지원내용 무료 건강검진, 장수사진 촬영, 법률상담, 문화공연 등 제공
- 문 의 처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02-2080-5575)

13. 노인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노인일자리사업단* 등록 후 9개월간 노인 돌봄, 공공업무지원, 학습강사, 환경미화 등의 일자리 제공 (월 급여 20만 원 지급)
  *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 문 의 처 읍 · 면 ·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1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원대상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문화학교(악기, 연극, 무용, 사진, 전통분야 등), 문화나눔봉사단, 문화동아리 등 다양한 어르신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 문 의 처 한국문화원연합회 (☎02-704-4311, 4332)

15. 어르신을 위한 요금감면 제도

- 교통비 감면
  - 지하철 무료이용, 철도30% 감면(주중) (문의처 : 코레일 ☎1544-7788)
  - 국내 연안여객선 20% 감면 (문의처 : 해운조합 ☎02-6096-2000)
  - 대한항공 10% 감면 (문의처 : 대한항공 ☎1588-2001)
- 문화활동비 감면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 미술관 · 공원 무료 입장 (문의처 : 읍 · 면 · 동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

창의적 사고에 열정을 더했죠

생활에서 문제 찾고 상식의 눈으로 규제개혁

일선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생각은 명쾌하다. 이들의 키워드는 바로 '생활과 상식'이다. 생활에서 찾고 상식으로 대하면 규제를 풀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활 속 발견에서 남다른 성과를 낸 우수 공무원의 얘기를 들어본다.

박길명 | 위클리 공감 기자

옥조근정훈장 수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인영 주무관

'걸어 다니는 아이디어 뱅크.'

서울시 뚝도아리수정수센터의 정인영(47) 주무관에게 붙은 별명이다. 정 주무관은 창의적 사고와 남다른 열정으로 상수도 설비와 업무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 업무가 시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멀리서 찾기보다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하고 더 좋게 바꾸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입니다."

정 주무관은 1993년 6월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임용돼 용산구 하수과, 구로구 치수과 등을 거쳤다. 그는 상수도 관련 설비의 품질 향상과 업무 개선에 앞장서 최근 5년간 창의 개선안 등 모두 155건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 주무관이 발명해 특허 출원한 것만도 모두 6건. 특히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 카운터 제조 방법은 연 400~500건씩 발생하던 대형 수도계량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몫을 했다. 이에 따라 대형 수도계량기 고장률이 33% 감소해 연 2억6000만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기계 분야를 공부했고 공무원이 되고 나서도 업무와 연관이 되니까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량기가 잘못돼 단수가 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정 주무관은 작은 노력이지만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고 눈에 띄는 예산 절감 효과도 낼 수 있어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력 덕분에 큰 상을 16개나 받았다. 정 주무관은 최근 4, 5년 사이에만 중앙우수제안 행정안전부 장관상, 정부 모범공무원 모범상, 환경부 장관상, 서울시 창의상 등을 받았다.

"저의 성과는 기술직 공무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리이자 보람입니다. 무엇보다 직장 동료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연간 특허 출원 2개, 업무 개선안 20~30개를 내는 게 제가 정한 목표입니다."

제 업무가 시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멀리서 찾기보다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개선할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하고 더 좋게 바꾸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입니다.



박해윤 기자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

박근혜 대통령은 1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모범 공무원 158명을 초청해 포상했다. 이날 포상 대상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가 예산 절감,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등에 앞장선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들과 대외적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국제 현안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들이다.

청와대는 "공무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정부 포상을 수여한 전례가 드문 만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한 것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핵심적 역할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

정 주무관은 처음엔 그러려니 하던 주위 사람들이 요즘에는 문제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물어오고 전화 문의도 많아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자신이 본보기가 된다는 생각에서다.

"제겐 이번에 받은 훈장이 과분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고요.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공무원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식적 접근과 동료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정 주무관. 내일은 어떤 발명품을 내놓을까.

기업 현장에서 듣는 격려의 말 한마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이 맛에 공무원을 하는구나' 싶죠.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 소관 업무 외에 다른 방면의 지식을 더욱 폭넓게 쌓아나갈 겁니다.



지효영 기자

＼ 수상자들은 공직에 대한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창의적 아이디어와 남다른 노력으로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들은 기관별 인사 운영 여건에 따라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특히 이번 훈·포장 수상자 20명 중 7명에게는 특별승진, 10명에겐 특별승급의 혜택이 주어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한·중 어업협상, 규제개혁 등으로 대외 협력 및 경제혁신에 기여한 공무원 74명에게도 포상했다.

근정포장 수상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박홍진 주무관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박홍진(41) 주무관이 '손톱 밑 가시', 즉 규제와 마주했을 때의 마음가짐이다. 지난해 한 업체는 경기 용인시 원삼면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다 유물이 출토되면서 6개월간 공사를 중단해야 했다.

업체 측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표조사와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벌였고 이에 수반된 비용 수억 원도 떠안았다. 공사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이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협조해야 하나 업체로서는 공사 지연에다 추가비용까지 부담해야 해 출혈이 컸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물어봤죠. 공사 중에 유물이 나오면 누가 처리해야 하는지. 열이면 열 '나라에서 해야지'였어요. 유물이 나오면 공사는 중단되고 발굴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누가 자발적으로 나서겠어요?"

결국 업체의 부담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박 주무관과 직원들은 지속적인 개선 건의에 나서 문화재청의 협조를 끌어냈다. 지금은 관계 법령 개정 등 개선작업이 추진 중이다. 박 주무관이 생각하는 규제개혁의 출발은 상식과 '역지사지(易地思之).'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면 돼요. 정책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국민의 입장에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법도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박 주무관은 지난해 100건 가까운 중소기업 규제 애로를 관계부처에 요청해 이 중 30여 건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그가 개선을 요청한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 증설은 규제개혁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관련 업체는 수출 물량의 10배를 수주하고도 농업진흥구역이란 이유로 공장을 새로 짓지 못하고 7년간 속을 끓여왔다고 한다. 박 주무관은 규제개혁은 '무한에너지'라고 말했다. 정부 사업엔 돈이 들어가지만 규제개혁의 경우 입력(돈) 없이 출력(성과)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업 현장에서 듣는 격려의 말 한마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이 맛에 공무원을 하는구나' 싶죠.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 소관 업무 외에 다른 방면의 지식을 더욱 폭넓게 쌓아나갈 겁니다."

'관의 부당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게 아니라 정당하게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같은 사람은 관에서 천금을 주고 살 사람이다.' 박 주무관은 다산 정약용의 이 말이 규제개혁과 딱 맞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G

한국 문화 제대로 배울래요

주한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소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주한브라질문화원



한국·브라질 교류 모임은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자리다.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교류는 늘었지만 문화 교류는 적어요. 이런 이유로 양국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과 브라질 학생 각 10명씩을 한자리에 모아 매달 3, 4시간씩 자신들의 음식,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발표·토론회를 연 거죠. 덕분에 서로에 대해 조금씩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송밝음 주한브라질문화원 문화기획팀장은 "인적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은 가시적인 성과를 찾기 어렵다"면서도 "한국 학생들이 토론회를 계기로 브라질 친구들에게 유학 생활,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아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한브라질문화원은 지난해 주한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소개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신청해 운영비 6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2012년 설립된 이 단체는 사업에 선정된 덕에 한국, 브라질 대학생 교류 모임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선정 단체에 1000만~2000만 원 운영비 지원

올해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주한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 소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어학당, 자생커뮤니티, 비영리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등 한국 문화 소개 활동, 한국 관련 정보 제공 등 한국 이미지 제고 활동, 주한 외국인 관련 기초자료 구축 및 네트워크 활동 등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10여 개 단체는 각각 운영비 1000만~2000만 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7개 단체를 선정해 사업 규모, 내용에 따라 각각 200만~700만 원을 지원했다.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주한 외국인에게 다채로운 한국 문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주한유학생지원협의회는 한국의 숨겨진 명소 탐방, 공모전, 사진 콘테스트를 열었으며,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는 주한 외국인을 초청해 한국 음악의 밤 행사를 선보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자선 걷기대회를 개최하고, 커뮤니티코리아에서는 템플 스테이, 비무장지대(DMZ) 탐방 등을 통해 한국 문화 탐방 캠프를 진행했다. 한편 옴니스코리아는 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외에도 주한 외국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해 한국 문화 홍보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확충했다.

이번 공모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 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이메일(sunhway@korea.kr)로 관련 서류(단체 일반 현황 및 연혁, 사업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3월 13일 발표 예정)는 1차 서면 심사(2월 26일 예정), 2차 제안발표 심사(3월 11일 예정)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G

주한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소개 우수 프로그램 모집

공모 목적 민간의 주한 외국인 대상 홍보기능 강화
신청 자격 주한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 소개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어학당, 비영리단체 등
신청기간 2월 16~24일
선정 혜택 선정 단체별 1000만~2000만 원 내외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공모 문의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사업과 044-203-3330

해양산업 건전한 생태계 구축

미래 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모

이혜민 | 위클리 공감 기자

"선박은 구역별로 다른 소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각각 설계기법과 설비구조가 다르기 때문이죠. 저희는 기관실과 화물차고에 필요한 소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로는 불을 못 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저희는 물을 미세한 입자로 변환해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건물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처럼 기관실에 미분무수 노즐을 수백 개 깔아 불을 끄는 것이죠. 정부 지원 덕에 시스템을 개발했고,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여러 차례 진행해 'DNV(노르웨이 선급)' 국제인증을 받았습니다."

김영한 (주)탱크테크 전무는 기술 개발자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시험 담당자들이 손톱은 물론 얼굴이 검게 그을릴 정도로 화재 위험을 무릅쓰고 일한 덕분"이라며 현장 업무자들을 치켜세웠다. 탱크테크는 선박 기자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에서 5억 원을 지원받아 선박 구역별 국제규정에 적합한 미분무수 소화 시스템을 개발했다.

1~3년간 2억~10억 원 지원

올해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자를 공모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신산업의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해양수산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해왔다. 사업 담당자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연구개발팀 이경재 연구원은 "해양수산 기업 95% 이상이 종업원 50명 이하로 영세하다"면서 "이 사업으로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기술경쟁력을 갖추면 해양산업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각각 1~3년간 최대 2억~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연구개발비의 75%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25%는 지원자가 인건비, 장비, 현금 등 현물로 출자해야 한다.

사업은 크게 3가지로 ▶미래 해양기술 개발 ▶해양 중소·벤처 지원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나뉜다(표 참조). 미래 해양기술 개발과 해양 중소·벤처 지원은 모두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 개발 과정'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자가 중소·벤처기업, 학교, 출연연구기관이 지원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중소·벤처기업으로 한정된다. 또한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은 '기술 개발 이후 과정'을 돕는 제도다. 기술사업화 지원은 생산을 위한 공정 지원과 같은 '사업화 기술 개발', 국제인증을 얻는 등의 '융·복합 제품 시장 검증'으로 나뉜다.

사업 구분	지원 내용 (참여 자격/조건)	연구 단계	예산	지원기간 및 예산
미래 해양 기술 개발	사업화 가능성, 실용성이 인정되는 기술 개발 (중소·벤처기업, 참여기업 동반한 학교·출연연)	개발	2억3000만 원	과제당 1~3년 9억 원 이내 (연간 3억 원 이내)
해양 중소·벤처 지원	사업화 가능성, 실용성이 인정되는 기술 개발 (중소·벤처기업)	개발	29억4000만 원	과제당 1~2년 5억 원 이내 (연간 2억5000만 원 이내)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화 기술 개발** 개발된 기술 중 제품화·사업화(매출 발생) 지원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25억 원	과제당 1~2년 10억 원 이내 (연간 5억 원 이내)
	융·복합제품 시장 검증 중소·중견기업 보유제품의 신뢰성 확보 지원 (중소·중견기업)	사업화	5억5000만 원	과제당 2년 2억 원 이내 (연간 1억 원 이내)

미래 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해양수산부(www.mof.go.kr) 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www.kimst.re.kr) 홈페이지에서 공고 내용을 확인해 지원할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연구 계획서와 관련 자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G

미래 해양산업 기술개발사업 공모

공모 목적 해양수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
신청 자격 중소·벤처기업, 학교, 출연연구기관 등
신청기간 1월 19일~2월 25일
선정 혜택 과제당 1~3년 동안 기술개발사업비 2억~10억 원 지원 (표 참조)
공모 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7

인기 영국 작가 **알랭 드 보통**

“나는 누구인가? 자신에게 질문 던져라”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내 이름은 한국어로 중간을 뜻하는 ‘보통’이지만 한국인들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

스위스 출신 영국 작가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한국에서 유쾌한 농담을 건넸다. 그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불안〉, 〈뉴스의 시대〉 등을 펴낸 세계적인 작가다. 또한 삶의 철학을 글로 풀어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이번에 한국인에게 던진 질문은 ‘왜 우리는 불안한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였다. 강연 전문 기업 마이크임팩트가 주최해 1월 16, 17일 서울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서 그는 일상의 일과 사랑에서 느끼는 불안에 대해 질문하고 해답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가 말하는 문제의 해답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자신, 상대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었다. 즉, 답은 질문 속에 있거나 질문 그 자체였다.



동아일보

세계적인 저자 알랭 드 보통이 1월 14일 한국을 방문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철학에 대해 강의했다.

돈 외의 것 말하는 ‘선한 수요’ 자본주의 불안 벗겨낸다

“행복은 10분이다.”

멋진 옷을 사 입고 달콤한 초콜릿을 먹고, 최신형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도 즐거움은 잠시뿐, 곧 불안이 엄습한다. 일상을 점령한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needs)과 내가 진정으로 욕망하는 것(desire)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은 광고의 홍수 속에 사는 자본주의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취약하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지금의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혼란을 이용하면서, ‘선한 수요(good demand)’와 ‘나쁜 수요(bad demand)’를 구분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소비하고 타인의 욕망을 좇으며 우리는 불안 속으로 더욱 침잠해 들어간다.

그는 불안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좋은 사회란 달과 시(詩)의 아름다움, 행복에 대한 수요가 넘치고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회, 즉 돈이 아닌 것에 대한 강한 의견이 있는 사회다. 그는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모습이 경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며 “소비자인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 밖으로 나와 강연장에 선 그는 객석의 물음을 향해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데도 서슴지 않았다. 관중석에서 여성 A씨가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다. 수요가 적은 직업을 사회에서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선한 수요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욕망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선한 욕망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 곧 유행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은 우정에 대한 욕망을 잘 활용한 예다."

이어 그는 행복, 우정, 사랑 등 자본주의 외곽에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은 영역을 찾아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신의 책이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이 바로 선한 수요가 작동한 것"이라며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더 많이 참는 것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이상하거나, 내면에 어떤 광기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친구들은 단지 좋은 친구가 되고 싶기에 나에 대해 정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오직 연인 관계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된다."

둘째 날 강연은 그의 출세작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와 같은 제목으로 진행됐다. 그는 좋은 관계를 위해 매일 15분간 상대의 얘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말했다. '어떤 것에 실망했는가', '내게 화난 것이 있는가', '어떤 부분이 변하길 바라는가'를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을 줄 것인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들이 정작 우리 생활에는 빠져 있다. 그보다 앞서야 할 질문은 사랑을 시작하기 전,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나를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미리 언질을 해준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은 그만큼 넓어질 수 있다.

객석에서 여성 B씨가 질문했다. "당신의 책에 보면 연인 관계에서의 권력에 대해 나온다. 우리는 이 권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나." 알랭 드 보통이 답했다. "모순적이게도 덜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에서 더 큰 권력을 갖는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은 더 많이 참는 것, 더 많이 이해하는 것 등 좀 더 불편한 감정을 많이 느끼게 한다. 그러나 연인 관계에서 더 힘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내가 더 이해하고, 더 참으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충만히 느껴라. 그것이 더 성숙한 자세다."

그는 성숙한 사랑에 관해 이렇게 덧붙였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믿는 것, 완전히 이해받겠다는 기대를 버리는 것, 내 자신이 때로는 이상하고 내면에 광기가 있다는 것을 수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로맨틱한 것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싹틀 것이다." G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획자로 참여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기획자로 참여하게 된 보통이 1월 15일 전시장이 될 청주의 옛 연초제조창을 방문했다.

알랭 드 보통이 올가을 열리는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기획자로 나선다. 2013년 비엔날레조직위원회가 보통에게 공예예술에 관한 저술을 부탁했으나 보통이 공예를 직접 다루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기획자로 참여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보통은 자신이 선정한 작가 16명과 함께 특별전을 꾸리게 됐다.

그의 최근 강연이 삶의 질문에 대한 풀이였다면, 이번 공예전은 '아름다움과 행복(Beauty and Happiness)'이라는 주제의 압축이다. 그는 공예전 기획과 관련해 "아름다움은 때때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받고 철학은 딱딱한 것으로 오해받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공예의 심미적 부분뿐 아니라 심리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제안"이라고 말하는 보통은 비엔날레와 같은 색다른 방법으로 관객과 소통하길 기대했다.

한편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는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이어진다.

짜증 나는 "고객님,…" 전화·문자 한 번에 차단

'두낫콜 서비스' 1월부터 본격 시행

김진수 | 위클리 공감 기자

시도 때도 없이 걸려와 성가시게 하는 금융회사의 영업 목적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깔끔히 해결할 묘책은 없을까. 정답은 '두낫콜(Do Not Call)' 서비스.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 이 서비스는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해당 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다.

두낫콜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www.donotcall.or.kr)'에 접속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마케팅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다수의 금융업권별 소속 금융회사를 선택한 후 두낫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신청자의 휴대전화 번호가 본인이 선택한 모든 금융회사로 전송되고, 약 2주 후부터는 상품 홍보 등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전화와 문자가 향후 2년간 차단된다. 신청 시 휴대전화 번호 이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송되지 않는다.



두낫콜 서비스 홈페이지

금융회사에 마케팅 연락중지 청구

이후 혹여 휴대전화 번호가 바뀌면 금융회사에 본인의 새 휴대전화 번호로 두낫콜 신청을 다시 하면 된다. 두낫콜 서비스는 영업 목적의 광고성 전화와 문자 발송을 차단하는 것으로, 금융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연락은 차단 대상이 아니다. 또한 휴대전화 이외의 집 전화나 이메일 등 다른 매체를 통한 마케팅 연락까지 차단을 원할 경우엔 각 금융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두낫콜 서비스 해당 금융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지역 농·축협), 수협중앙회(회원조합),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12곳이다.

한편 전화권유판매(텔레마케팅) 전화·문자 차단 방법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불법 수신거부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업체는 자동으로 수신이 거부되므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에 대해선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www.donotcall.go.kr)'에 접속해 소비자가 직접 수신거부 등록을 할 수 있다. G

“국민이 기자다”

캠퍼스·시니어·주부·글로벌기자 모집… 국내외 곳곳 발로 뛰며 취재

조영실 | 위클리 공감 기자

KTV(한국정책방송원·원장 류현순)가 학생·어르신·주부·외국인 기자들로 구성된 ‘2015년 KTV 국민기자단’을 모집한다. 2016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될 국민기자단이 직접 제작한 리포트는 뉴스 프로그램 ‘국민 리포트’를 통해 방영된다.

KTV는 2011년 10월부터 국민이 직접 취재하고 제작한 뉴스를 방송하는 국민기자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의 대학생들로 이루어진 ‘캠퍼스기자단’으로 출발한 KTV 국민기자단은 55세 이상 어르신들로 꾸려진 ‘시니어기자’, 55세 이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주부기자’,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글로벌기자’로 구성돼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참여와 소통의 창구로 자리 잡았다.

KTV 국민기자단이 국내외 곳곳을 누비며 취재해 방송으로 내보낸 뉴스 리포트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운영 첫해인 2011년 70여 건에서 2012년 500여 건, 2013년 700여 건, 지난해 1400여 건으로 지난해 말까지 모두 2752건의 뉴스 리포트가 전파를 탔다. 현재 KTV 국민기자단은 캠퍼스기자 131명, 시니어기자 51명, 글로벌기자 11명, 주부기자 28명 등 총 221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현근 ‘국민 리포트’ CP(책임 프로듀서)는 “KTV를 대표하는 국민 참여 프로젝트인 국민기자단 모집에 끼와 열정, 성실함을 갖춘 분들이 많이 지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TV는 선발된 국민기자에게 활동비와 명함을 지급하며, 캠퍼스기자에게는 인턴십 수료증도 함께 수여한다.

원서 접수는 2월 13일(금)까지. 지원 자격과 모집 일정 등은 KTV 홈페이지(www.ktv.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







1 6·25를 맞아 강원도 철원 최전방 철책선을 찾은 KTV 시니어기자 유한권 씨.
2 서울에서 열린 성패트릭데이를 취재한 KTV 글로벌기자 데이시 씨(파라과이).
3 KTV 국민기자가 직접 만드는 뉴스 프로그램 ‘국민 리포트’.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손가락 보면 운명이 보인다?



gettyimages

약지는 남성 호르몬, 검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한다.

김창엽
자유기고가

정초 한 해의 운세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른바 철학관이나 점집이 북적대던 시절이 있었다. 시대가 변한 요즘, 거리의 '철학자'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 듯하다. 그 대신 운명이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의 상당 부분을 과학이 해결해주고 있다. 손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1980년대 이후 손, 그 가운데서도 손가락에 대한 연구는 가히 봇물 터지듯 붐을 이루고 있다. 특히 2번째 손가락(검지)과 4번째 손가락(약지)의 비율에 관한 연구는 차고 넘쳐난다. 도대체 검지와 약지에 무슨 연구할 게 그리도 많이 숨어 있다고 세계의 학자들이 두 손가락을 파고드는 걸까? 수많은 연구자들의 공통적인 관심 포인트는 손가락에 미치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모아진다.

조물주의 조화인지, 검지와 약지의 길이 비율이 정해지는 건 엄마 배 속에서부터이다. 그것도 태아 초기, 즉 임신한 지 13주 이내에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때 결정된 두 손가락의 길이 비율이 평생을 간다는 데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은 거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약지는 남성 호르몬, 검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이다. 남성 호르몬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는 테스토스테론에 태아가 많이 노출되면 약지가 더 발달한다. 테스토스테론만큼은 아니지만, 검지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다. 약지와 검지는 얼핏 보면 길이가 엇비슷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지가 미세하나마 길다. 손가락의 '마디 금'도 약간 차이가 있다. 검지는 선이 하나다. 그러나 약지는 손바닥과 경계 부분, 그리고 중간 마디 금이 두 겹이다.

'손가락 학자'들의 관심은 검지의 길이를 약지의 길이로 나눈 값에 쏠린다. 지금까지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두 손가락 비율 값은 대략 0.95~0.96, 여성들은 0.96~0.97 수준이다.

상당수 학자들은 두 손가락의 비율 값이 적을수록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남성의 경우 정자 숫자도 많다고 주장한다. 또 이런 남성들이 여성의 호감을 사는 경향이 있다고도 한다. 또 검지 대 약지 길이 값이 적을수록 수학에 뛰어나고 리더십이 앞선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반면 손가락 비율 값이 적은 남성 가운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ADHD)'이나 섭식장애에 노출될 위험 또한 크다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 검지 대 약지 비율은 개인차보다 민족이나 인종 차이가 크다는 연구 논문도 있어 기준치 설정이 쉽지 않다. 한 예로, 유럽 남성들의 경우 검지 대 약지 값은 폴란드가 0.99로 가장 큰 반면 핀란드 0.93, 스웨덴 0.95 등으로 북유럽 남성들은 낮았고, 독일은 0.96으로 중간 정도였다. 과거 바이킹의 나라 남성들이 검지가 현저히 짧다는 것이다.

한편 왜 오른손이 길이 측정의 기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 다만 약지의 길이를 재는 기준점이 두 겹의 마디 금 가운데 아래쪽인 것은 공통적이다. 검지와 약지 길이 차이가 보통 수 밀리미터(mm)에 불과해 약지의 마디 금 중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재느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자나 깨나 가축 전염병 예방



1955년에 나온 가축 전염병 예방 포스터.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전 한국PR학회장

잊을 만하면 나오는 뉴스가 있다. 구제역(口蹄疫)이 확산될 조짐이 보인다거나 조류독감(AI) 정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뉴스다. 그때마다 방역당국과 축산농가들은 소와 돼지를 구제역으로부터 방어하고 닭과 오리를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부터 막아내기 위해 초비상에 들어간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축을 조사한 다음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즉각 살(殺)처분을 한다. 구덩이를 파서 가축을 땅속에 묻는 장면을 뉴스 화면으로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하물며 그 가축들을 직접 키운 주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겠는가?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방제에 힘을 쏟고 있지만, 가축 전염병 예방 문제는 1950년대부터 벌인 국가적 캠페인이었다.

한국민사원조처(KCAC : Korean Civil Assistance Corporation)의 포스터 '가축 전염병 예방' 편(1955)을 보자. "가축 전염병 예방"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전염병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명쾌한 카피에 흥미로운 그림을 더해 인상적으로 설명했다. "축사에 드나들 때는 반드시 신발을 소독하자", "병이 들거든 곧 가축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하자"…. 전염병에 대처하는 순서에 따라 카피 메시지를 제시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염병 예방 순서와도 큰 차이가 없어 배시시 웃음이 나온다.

포스터에 격자무늬 창과 비슷한 그리드(Grid) 레이아웃을 적용함으로써 단계별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화가 몬드리안이 자주 썼기 때문에 몬드리안 레이아웃이라고도 하는 이 레이아웃의 매력은 핵심적인 내용을 구획을 지어 정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축사에 드나드는 장면을 묘사한 첫 번째 그림, 주사기를 크게 강조한 오른쪽 하단의 그림 등 일러스트레이션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이 포스터를 제작한 KCAC는 195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유엔 산하의 원조 기구이다. KCAC는 6·25전쟁 직후에 민간인의 원조와 한국의 재건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군인 528명을 비롯해 모두 765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이 기구는 교통, 통신, 공공사업, 농업, 건강, 복지, 원조물자의 공급 및 분배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다 1955년 11월 30일 해체됐다. 이 기구는 특히 우리나라 농림부와 함께 농촌 지원 캠페인을 전개함으로써 농촌 계몽에 크게 기여했다.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 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노력한다 해도, 전염병은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해 예측 불허의 속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최대 현안도 가축 전염병이라고 한다. 이번 기회에 초기 방역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했으면 싶다. KCAC의 포스터가 나온 지 벌써 60여 년이 지나는 시점이라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G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긍정 에너지 재충전의 시간

어린이들에게는 남의 울음을 먼저 듣는 마음 귀 등 긍정적 에너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작가가 바로 마해송이었다.

우찬제
문학비평가·서강대 교수

마해송의 동화 '바위나리와 아기별'(1923)은 슬픈 현실에서 길어낸 아름다운 이야기다. 남쪽나라 바닷가에 '바위나리'라는 오색영롱한 꽃이 피어난다. 바위나리는 쓸쓸한 바닷가에서 "세상에 제일가는/ 어여쁜 꽃은/ 그 어느 나라의 무슨 꽃일까./ 먼 남쪽 바닷가/ 감장돌 앞에/ 오색 꽃 피어 있는/ 바위나리지요."라는 노래를 부르며 애타게 친구를 찾고 때때로 운다.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은 아기별이 임금님 몰래 내려와 바위나리를 찾는다. 아기별은 바위나리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놀다가 하늘 문이 닫히기 직전인 새벽녘이 되어서야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다음 날 밤에도 남쪽 하늘에서 가장 먼저 뜨는 아기별은 바위나리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해서 둘은 정이 들고 아름다운 우정을 나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름답던 바위나리가 병들게 된다. 아기별은 병든 바위나리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다가 그만 하늘 문이 닫히는 시간까지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자 하늘나라 임금님은 아기별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린다. 그렇게 아기별을 만나지 못하게 된 바위나리는 점점 더 시들어가다가 어느 날 바람에 날려 바닷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이를 알게 된 아기별은 슬퍼서 매일 울다가 그만 임금님에 의해 하늘나라에서 추방된다.

동화의 마지막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하늘에서 쫓겨난 아기별이 떨어져 빠진 곳이 마침 바위나리가 날려 들어간 그 바다였고, 그 후로도 그 남쪽나라 바닷가에는 해마다 아름다운 바위나리가 피어나게 되었다고 했다. 서술자는 어린이 독자들에게 질문한다. "바다를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하게 밝게 보이는데 '웬일'일까요?" 그리고 그 대답이 일품이다. "그것은 지금도 바다 밑에서 한때 빛을 잃었던 아기별이 다시 빛나고 있는 까닭이랍니다." 이 상상력, 다시 말해 오로지 바위나리를 위한 아기별의 사랑이 하늘에서 추방되면서 잃었던 빛을 회복해 다시 환하게 빛나게 되었다는 상상력에 무척 감동하고 고무됐던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아기별이 빠져 그 별빛으로 환하게 비치는 환상적인 바다 이미지는 그때까지 바다를 직접 보지 못했던 내게 거의 원초적인 인상에 가까웠다. 그 아기별은 하늘로부터 추방되었는데, 어찌하여 그 빛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증에 어린 나는, 아마 그 누구보다 먼저 바위나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그 열린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엮어나갔던 것 같다.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어린 시절 내게 무척 의미심장한 귀감으로 다가왔다. 남의 울음을 먼저 듣는 마음의 귀와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을 온몸으로 발산할 수 있는 에너지. 그러면서 스스로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힘.

어린이들에게는 이를 포함한 긍정적 에너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작가가 바로 마해송이었다. 올해는 그런 어린이의 긍정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살고 싶었다. 그런데 한 달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많이 방전된 것 같아 다시 떠올려본다. G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수요일 밤의 산책

특별한 수요일, 큐레이터와의 대화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에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 특별전시 및 상설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나는 토요일, 밤에 즐기는 박물관

연인과 함께, 가족과 함께 데이트를!
토요일은 저녁 9시까지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 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 150m (도보 8분 거리)

www.museum.go.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